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일시 | 2020.10.28(수) 14:0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식 14:00 ~ 14:20

격려사 박병석 국회의장

축사 정성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제 및 토론 14:20 ~ 16:00

사회자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발제1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발제2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토론 이은주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격 려 사]

박병석 국회의장 7

[축 사]

정성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9

[발 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15

2021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31

[토 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47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57

이은주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1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69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85

격려사



국회의장 박병석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제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홍근·추경호 간사님, 이은주 의원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오연천 교수님과 예산정책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지난 8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 9월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9만 2천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도 위축됐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8월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4.9% 급감해 타격이 더욱 컸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경제 위축,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불안요소도 내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혹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제 활력을 잃어버린 나라가 될 것인지가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도 예산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돼야 합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회적 약자들에게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면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9조쯤 감소할 전망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한 건전재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IMF는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민국은 K-방역, 사회안전망, 적재적소 재정투입으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IMF의 경고대로 구조적 취약성, 빈곤과 불평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이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보여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예산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가 한층 생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사회자·발제자·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예산정책처 개청과 함께 시작된 예산안 토론회는 이제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아우르는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라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라 전례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기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고용상황 모두 기대만큼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도형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투입되는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야 예결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야 의원님들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이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에 큰 관심을 갖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국회예산정책처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발 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21년도 예산안 -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발 제 1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

2021년 예산안



목차

- I 경제여건 및 그간의 대응
- II 2021년 예산안 전체모습
- III 주요 투자중점
- IV 혁신적 재정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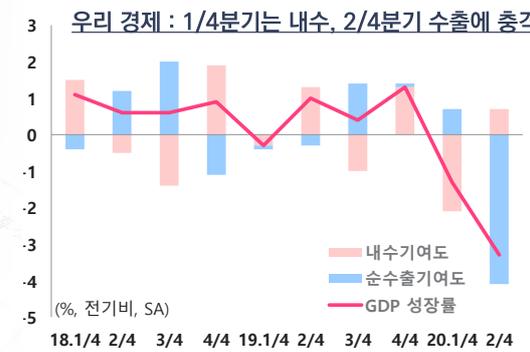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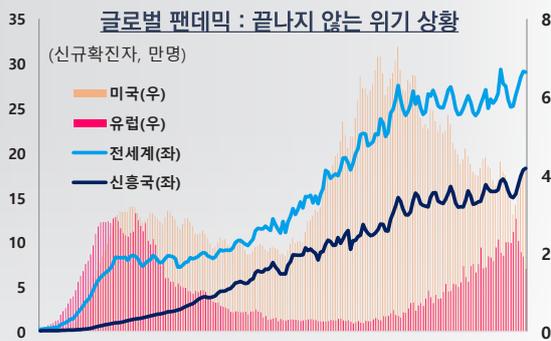
2

I. 경제여건 및 그간의 대응

3

1. 경제여건

글로벌 팬데믹 영향으로 전세계 및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



4

2. 그간 대응과 평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총 31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마련·추진

✓ 비상경제회의의 前

1~3단계 종합 패키지 지원 32조원

*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 민생·경제 종합대책, 1차 추경 등

✓ 비상경제회의의 체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35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 보강대책 4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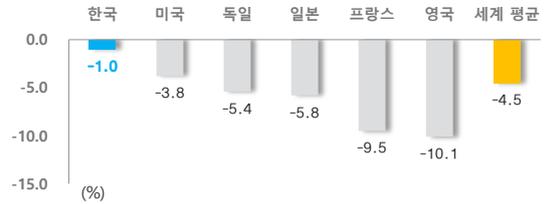
* 긴급재난지원금(14.3조원, 2차 추경 12.2조원), 고용안정특별대책, 사회보험료 감면, 수출·벤처기업 지원 등

✓ 비상경제 중대본 체제

하경정 및 3~4차 추경 43.4조원

*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 민생·경제 종합대책, 3~4차 추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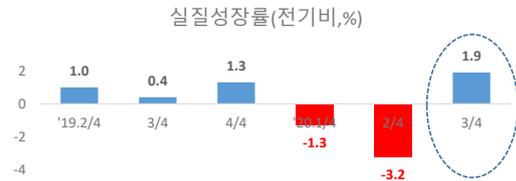
OECD 회원국 중 '20년 성장전망 1위



✓ (세계경제) 지난 6월 전망대비 세계경제 '20년 성장률 상향 조정(+1.5%p)

✓ (한국경제) 효과적인 방역,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20년 성장률(△1.0%) OECD 회원국중 1위('21년 3.1%)

'20.3/4분기 (+)성장 전환



5

(참고) 2020년 4회 추경 편성

59년만의 4회 추경 편성: 66.9조원 (세입 12.3조원, 세출 54.6조원)

1차
11.7조원

-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1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4.1조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3.5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1.2조원)

2차
12.2조원

-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3차
35.1조원

- 세입경정(11.4조원)
- 기업·일자리 금융지원(5.0조원)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10.0조원)
- 경기보강 패키지(10.4조원)

4차
7.8조원

-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9조원
- 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5조원
- ③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 ④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1.8조원
- 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0.2조원

6

II. 2021년 예산안 전체모습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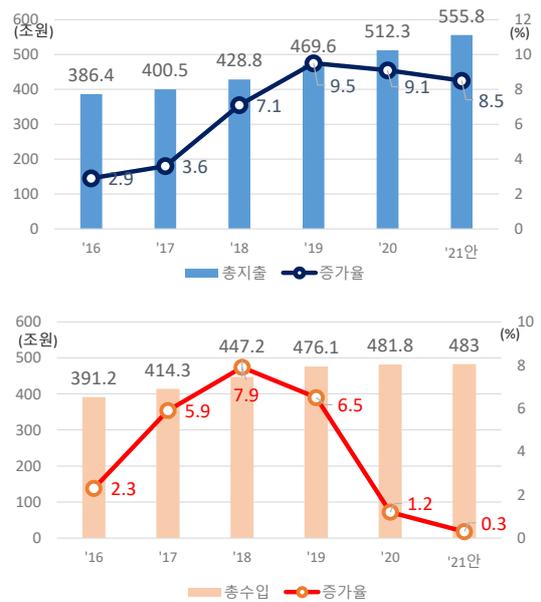
1. 2021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량

경기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선도투자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

-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
-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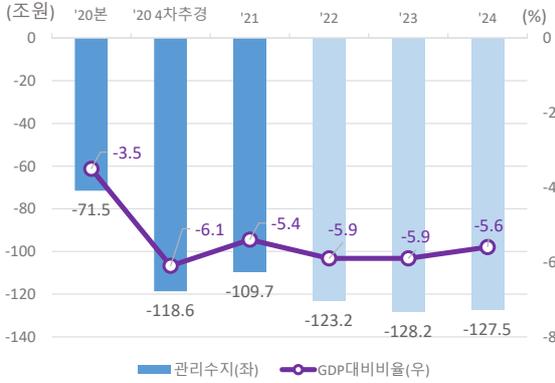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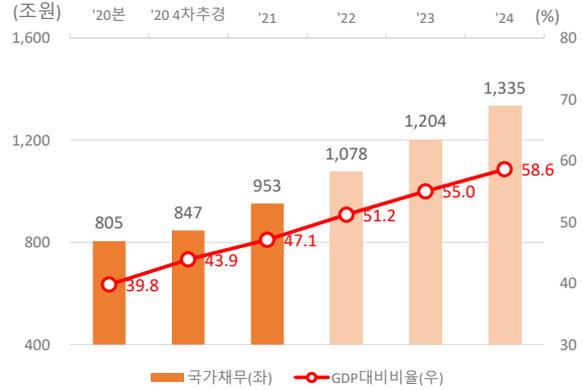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내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5.4\%$, 국가채무비율은 47.1% 예상

관리재정수지 : '20년 본예산 $\Delta 3.5\%$ → '21년 $\Delta 5.4\%$



국가채무 : '20년 본예산 39.8% → '21년 47.1%(추경반영)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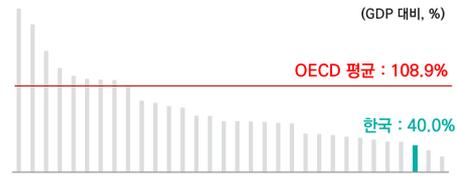
선진국 대비 양호하나, 경계 필요

✓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 증가속도(D2, '12-'18): (OECD)107.7 → 108.9 (+1.2%p)
(韓) 35.0 → 40.0 (+5.0%p)

✓ 위기대응 위한 국가채무증가폭 상대적 양호

* 일반정부부채비율 변화 전망(IMF, '20.6월, '19-'20년):
(세계) +18.7%p (선진국) +26.0%p (한국, 4차추경) +8.0%p



3. 분야별 자원배분

주요 증가분야: (산업·환경·R&D) 디지털·그린뉴딜 핵심분야 중심 증액
(복지·일자리)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큰 폭으로 증액
(SOC) SOC 디지털화, 안전투자 중심 확대
(국방) 스마트 강군 구축, 軍 사기진작 투자 확대



분야별 자원배분 전체모습

	'20	'21	증감	%		'20	'21	증감	%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4	10.7	7. SOC	23.2	26.0	2.8	11.9
2. 교육	72.6	71.0	△1.6	△2.2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3.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9. 국방	50.2	52.9	2.7	5.5
4. 환경	9.0	10.5	1.5	16.7	10. 외교·통일	5.5	5.7	0.2	4.3
5. R&D	24.2	27.2	3.0	12.3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5.4	22.9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7.5	9.5

III. 주요 투자중점

2021년 예산안 개요

최우선 전략과제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4대 투자중점**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 ✓ **그린 뉴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 ✓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고용 유지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사랑상품권, 4+4바우처·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확충
- 수출마케팅 지원 등 수출활력 제고
-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2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혁신성장 생태계(R&D, 인재, 금융, 조달) 확산
- DNA, BIG3 등 미래산업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역동성 강화

3 포용적 고용· 사회안전망 공고화

- 생계·의료·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고보·산재 적용 확대 등 쉰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4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 재해예방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
-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군사기진작 지원
-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참고) 20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 디지털 뉴딜(7.9조원)
- 그린 뉴딜(8.0조원)
- 안전망 강화(5.4조원)

21.3조원
(지행비 및 민자 포함시 총 32.5조원)

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 고용유지 46만개(1.2조원)
-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4.3조원)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3.1조원)

8.6조원

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지원(1.3조원)
- 4+4비우치·쿠폰(0.5조원)

1.8조원

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 국가균형발전프로그램 등 지역발전 투자(11.8조원)
- 지역인재·특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력(0.4조원)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2.3조원)
-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5.1조원)

16.6조원

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미래환경산업펀드

1.0조원

6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 투자자금 8.6조원 공급(재정소요 2.3조원)
- 융자자금 36.7조원 공급(재정소요 30.0조원)
- 보증자금 27.6조원 공급(재정소요 1.6조원)

33.9조원

7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숏단계 일자리 지원(3.9조원)
- 주거·금융·자산형성 등 생활안정(12.3조원)
-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4.5조원)

20.7조원

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생계] 부양무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5.5조원)
- [의료]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확대 등(18.7조원)
- [주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21.0조원)
- [교육]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1.7조원)

46.9조원

9 K-방역 + 자연재해예방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1.8조원)
- 풍수해·산사태·하천·댐관리 등 수해예방(2.6조원)
- 교통안전 환경개선·산재예방·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지키기(2.7조원)

7.1조원

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공기(1.3조원)
-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 맑은 물(1.1조원)
- 도시숲, 자원순환 촉진 등 녹색생활 공간조성(0.6조원)

3.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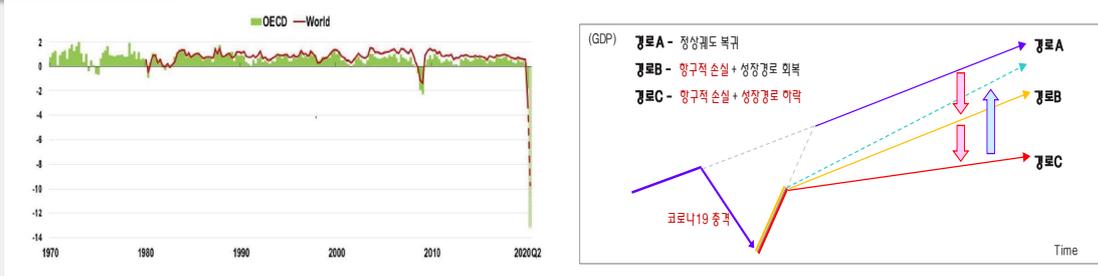
10대 중점 프로젝트
(약 160조원 수준)

13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1)

코로나 위기극복 + 글로벌 경제 선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7.14)

위기극복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대응



구조변화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 비대면화·디지털 전환 가속화

5G 인프라 등에 \$1조 투자 검토중

데이터 인프라 등에 25년까지 1.2조위안 투자

✓ 기후위기의 시급성 재평가

2050 탄소제로 목표

100% 재생에너지 사용추진

✓ 취약고리에 대한 보강의 목소리

• 구조변화 과정에서 실업·양극화 우려 확대

•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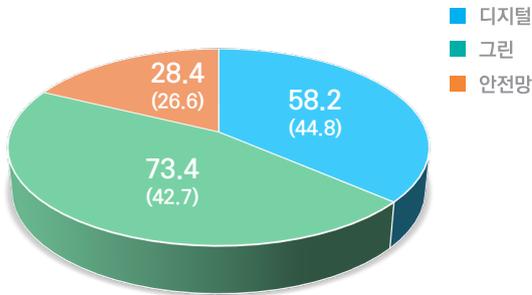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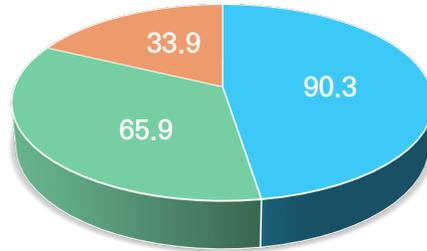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

'25년까지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효과 190.1만개

분야별 투자규모(~25년, 조원)



분야별 일자리(~25년, 만명)



* 중사업비 기준(괄호안은 국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

15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3)

'21년에는 국비 21.3조원 투입

디지털 뉴딜 (7.9조원)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

- ✓ (데이터범 구축) 시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의료기기 안전 등 43.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 ✓ (디지털 교육인프라) 그린스마트 스쿨 715동: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 (기반시설 디지털화) 국도 50%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국가하천 57%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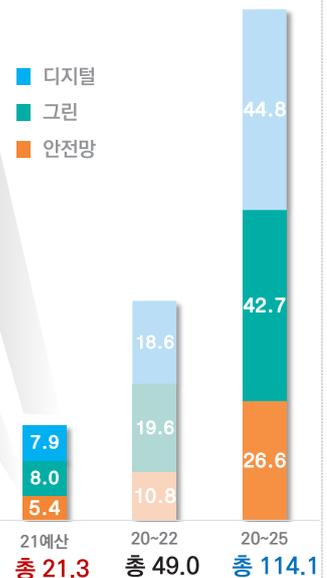
그린 뉴딜 (8.0조원) : 경제 기반의 저탄소·친환경 전환 가속화

-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2만호) 단열재 교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 및 통신선 공동지중화 (40C-km)
-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기, 수소차 11.6만대 보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및 R&D, 녹색금융 지원 등

안전망 강화 (5.4조원) : 경제 주체의 회복·적응력 강화

- ✓ (충충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사람투자 확대) 디지털, 그린 인재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한국판 뉴딜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기준, 단위: 조원)



16

2.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1)

일자리 유지·창출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방위 지원

일자리 200만개 유지·창출 (5.8→8.6조원)

고용유지: 46만명

-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45만명, 1.2조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지역, 0.8만명

민간일자리: 57만개

-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등 14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
- 중장년 구직급여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 2,500명 등
-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12→15개소),
희망리턴패키지(3.1→4.6만개) 등

공공일자리: 103만명

- 노인돌봄 3.3만개 자활근로 5.8만개
- 장애인일자리 2.5만개

소비활력 제고 (0.7 → 2.1조원)

소비 촉진

-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 농수산, 문화, 관광분야
2조원 규모 소비 창출 유도 (0.5조원, 2,346만명)

지역상권 회복

- 지역사랑상품권 3 → 15조원
- 온누리상품권 2.5 → 3조원

관광 활성화

-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공항입국·숙소·관광지 동선에
따라 교통, 숙박, 볼거리 등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2개권역)
- 디지털 관광콘텐츠 박물관 등 지역관광자원 113개소
대상 AR·VR 등 신기술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화
- 생태관광 한려해상 등 6대 국립공원내 자연체험장 등
생태관광 인프라 신규 확충(300억원)

17

2.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2)

일자리 유지·창출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방위 지원

민간·공공투자 확충 (51.5→65.9조원)

민간투자: 39.9조원

- 정책자금 총 공급 54.5 → 72.9조원 (+18.4조원)
(재정소요 26.4 → 33.9조원)
- 뉴딜펀드, 모태펀드 등 맞춤형 공공투자펀드,
중진, 소진기금 융자지원, 신기보 및 지신보, 무보 출연
- 해외투자 유턴외투기업 보조금(550 → 1,100억원),
송도글로벌캠퍼스 해외대학 공동기숙사 신설

공공투자: 26조원

- 물류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 등
- 도시건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SOC디지털화 4대 SOC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투자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5.4 → 6.0조원)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13.3→16.9조원)

- 지역발전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프로젝트 공정 집중관리 (19개 SOC 설계·착공, 4개 R&D 실증·사업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 지역협약방식으로 추진 (신규 450억원)
(생활 SOC)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 지원 (총 규모 10.5 → 11.1조원)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청년자립마을 12개소,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 등 젊은 층 농어촌유입, 정착, 지역활성화 지원
- 지방재정 보강 지방채 인수 규모 확대 (0.7 → 2.6조원), 균특 포괄보조사업 확대(2.4 → 2.5조원)

수출 활력 제고 (0.9→1.2조원)

무역 투자·금융

- 무보, 수은, 해외인프라 투자공사 등을 통한
무역정책자금 5.8조원 공급 (재정지원 0.6조원)

수출 마케팅

- 수출바우처 등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국내기업 해외유망 플랫폼 입점 지원

수출다변화

- K-푸드, 의료, 뷰티 등 수출품목 다양화 및
신남방·북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18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1)

R&D 혁신자원 생태계 확산과 함께 DNA + BIG3에 중점 지원

혁신생태계 조성 (5.8→8.6조원)

R&D투자

- 투자확대 투자규모 24.2→27.2조원
- 투자효율화 융합R&D 1.2→1.8조원 등 R&D 성과제고

혁신인재

- 고등인재 2만명 양성(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신규)
- 실전형 전문인재 6.3만명 양성 (0.4 → 0.5조원)

혁신금융

- 혁신모험자금 7조원 공급(재정 2.1조원)
 - 혁신투자펀드 5조원, 보증 1조원, 융자 1조원 등
 -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등 지원

혁신조달

- 정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99 → 500억원)
- 민간 혁신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등 민간초기시장 창출

DNA + BIG3 (5.0→7.1조원)

DNA

- **Data** 구축→개방→활용 전주기 생태계 강화 0.8→1.5조원
 - AI학습용 데이터 구축(0.3조원), 공공데이터 개방(0.2조원) 등
- **Network** 5G 융합서비스 + 실감콘텐츠 0.7→0.9조원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679억원)
 - 5G 국가망 구축(205억원) 등
- **AI** 핵심원천 R&D + 융합지원 0.4 → 0.7조원
 -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679억원)
 - AI바우처 200개사(560억원), AI-X프로젝트(503억원) 등

BIG3

- **시스템반도체** 0.3 → 0.4조원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1,223억원) 등
- **미래차** 1.5 → 2.0조원
 - 자율주행 기술개발(882억원, 신규)
 - 전기차(73→10.1만대), 수소차(1.3→15만대) 보급(16조원)
- **바이오헬스** 1.3 → 1.7조원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0.2조원) 등

19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2)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 주력산업 고도화에 집중 투자

그린산업 육성 (1.3→2.1조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 자금 국민주주프로젝트(370억원) 등 금융지원
- 입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4개 권역) 등

수소산업 인프라

- 생산 수소생산기지(9개소), 생산-저장시스템 R&D 등
- 보급 수소차 구매보조(1.3→1.5만대) 등

에너지효율 제고

-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225만호 보급
- 노후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1,200동

녹색기업 육성

- 환경현안해결 혁신기술보유기업 지원
 - 75개 기업 선정,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765억원)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 (4.7→5.5조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 품목 확대 對日 100대 → 對세계 338개 품목
- 자금 공급 펀드·보증 등 1.6조원

산업단지 고도화

- 산단 스마트산단(7개), 산단대개조(5개) 집중 지원
- 경자구역 2개 추가지정 + 혁신클러스터 운영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 스마트화 디지털 클러스터(3개소), 스마트공장 고도화
- 금융지원 스마트화 지원 융자·보증 1조원 공급

유망 서비스업 육성

- 문화·관광 온라인실감형 K-pop 공연제작(290억원) 등
- 건강관리 비대면헬스케어(9만명), 스마트병원(3개소) 등

20

4.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1)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4대 사회안전망 확충 (41.7→46.9조원)

생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폐지(+15.7만 가구)
- 기초생보 기준소득 단계적 인상(향후 6년간 연 2%p)

의료

- 의료급여 정신과 행위별수가 전환, 재가의료급여 시범도입
-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10.2 → 11조원)

주거

- 공적임대 공급확대 (18.1 → 19만호)
- 주거급여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설

교육

- 고교무상교육 2·3학년 → 전면 실시 (0.7 → 0.9조원)
- 장학금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1.5만명)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장애인

-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25 → 30만원
- 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 (9.1 → 9.9만명)

농어민

- 농가소득 농지연금(13→14천명), 농지매입 확대
- 어가소득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 보상금 보훈보상금 3% 인상
- 전상수당 전상군경 전상수당 인상(월 23 → 90천원)

다문화·정보취약계층

- 다문화 사례관리사 174→208명, 통번역인력 282→312명
- 정보취약계층 공공 Wi-Fi 1.5만개소, 교육센터 1,000개소

21

4.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2)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적극 대응

전국민 고용안전망 (16.5→20.0조원)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

- 고용보험 예술인·특고 46.5만명 고용보험료 신규지원
- 산재보험 보험적용 특고직종 9→14개 확대(27만명)

고보 사각지대 해소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신규 0.8조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40만명 지급

근로자 생활안정

- 구직급여 수혜자 확대 137 → 164만명
- 산재보험 급여 확대 5.9 → 6.5조원

직업훈련

- 신기술분야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집중양성(0.4→0.5조원)
- 인프라 폴리텍캠퍼스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구축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저출산 극복

- 보육인프라 보육료 3% 인상, 보조대체교사 700명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리모델링 529개소
- 돌봄지원 돌봄사각지대 해소 + 초등돌봄 확대
- 시간제보육 +20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4개소
- 학교돌봄 +700실, 초등교실활용돌봄 +750실 등
- 공공임대 신혼부부 5.2→6만호, 청년 4.5→5만호

고령화 대응

- 소득지원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월 25 → 30만원
- 노인일자리 74 → 80만개 확충
- 돌봄고도화 맞춤형·비대면 돌봄서비스 고도화
-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45 → 50만명
- 디지털돌봄 확대 2.5 → 5.8만명
- 실버산업 고령친화기술·제품개발 촉진
- 치매 R&D(174억원), 고령친화산업지원(23억원)

22

5.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1)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및 국민의 생명·인권 보호 강화

K방역 고도화 (1.2→1.8조원)

고도화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노인·임산부 등 약 1,500만명
-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 → 1,000개소, 500억원
- 감염병 대응시설 전문병원 3개소, 기능보강 1,683억원
- 책임의료기관 권역(12→17개소), 지역(28→35개소)

산업화

- 백신·치료제 투자확대(452억원), 임상 맞춤형(0.2조원)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공, 연구 본격화(137억원)
- 인재양성 한국형 NIBRT 도입(30억원, 100명)
- ICT융합 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4억원)

세계화

- 수출확대 인허가·인증·조달진출 지원 113억원
- 보건ODA 해외진출 연계 ODA 0.2 → 0.3조원

국민생명 및 인권보호 (4.1→5.4조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0.8만개
위험도로 210개소 개량투자 등 1.7→1.9조원
- 산재예방 위험기계·공정개선 및 용자 0.1→0.7조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 자살예방 전담인력 200명

수해예방

- 풍수해 시설개보수 등 지원 1.4→1.6조원
- 산사태 사방댐 추가설치 296→390개소 등
- 국가하천관리 제방보수 등 0.6→0.8조원
- 댐관리 안전감시체계 및 안전성보강 380→678억원

인권보호

-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71→81개 등
- 여성 디지털성범죄 단계별 대응 +90억원

23

5.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2)

공기·물·공간 등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및 국방·외교 투자 강화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2.2→3.0조원)

깨끗한 공기

-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0.2→0.5조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DPF부착·LPG전환 0.4→0.5조원
- 저녹스보일러 지원금 상향(50→60만원) 등
- 감시고도화 드론 등 활용 90→184억원

맑은 물

- 상수도 ICT기반 스마트관리체계 0.3→0.4조원
- 노후 지방상수관망·정수장 정비 등
- 수질개선 수질측정망 고도화(10개) 등

녹색공간

- 도시숲 조성 1,047→1,557억원
- 국토 대청소 도시·농촌·해양쓰레기 처리투자
- 기후변화 적응강화 스마트그린도시 조성(25개소) 등

스마트강군 및 외교협력 강화 (51.8→54.6조원)

스마트강군 기반구축

- 국방전력 고도화 ①핵·WMD 핵심무기체계 구축
②첨단핵심기술·부품 국산화(0.4→0.7조원)
③민군 공동 R&D, 민간·군 상호기술이전
- 전투역량 강화 ①첨단전투장비 보급 확산
②AI활용 무인경계시스템 조기구축
③AR·VR기반 과학화 훈련

군 사기진작

- 사기진작 패키지 인건비, 급식, 의료 등
맞춤형 지원 3.5 → 3.8조원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 전략적 양자·다자외교
- 한류·비대면 외교 재외공관 한류 플랫폼 활용(173억원)
- 융합ODA 신남방·북방 패키지 지원 등 0.27→0.33조원

24

IV. 혁신적 재정운용

혁신적 재정운용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 부처간 연계·협력 통한 협업예산 편성

지출 구조조정

-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에 따른 감·증액 연계
 - 쉼 사업 우선순위 평가 후, 후순위 사업 감축·폐지
 -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재투자

분야별·부처간 감·증액 연계 예시

감액(-)	증액(+)
(도로) 신규 토목건설공사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 지능형교통체계 등 SOC 디지털화
(환경) 하수도 등 수질개선	해상풍력단지 개별지원 등 그린에너지 수소차보급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외교) 방한초청 등 대면	K-방역 등 모범 정책사례 디지털 콘텐츠화, 초청연수를 비대면 전환

- 공공부문의 경비절감을 통한 고통분담
 - 4대 경상경비 및 전체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 5% 이상 감액
 - 공무원 처우개선을 0.9% (최저임금 인상률 1.5%보다 낮은 수준)

재량지출의 10% 수준 구조조정 달성

협업예산 편성

-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한 협업예산 편성
 - 투자계획 사전조율 등 거처 부처 예산공동요구 → 묶음예산 편성
 - 경제·사회 파급효과 큰 핵심 사업군을 12대 중점 협업과제 선정

중점 협업과제 예시

디지털 인력양성 (전문적 협업형) 비교우위 토대로 분업 - 초중급(고용), 전문인력(과기,산업)	신약·의료기기개발 (주기별 협력형) 부처간 전주기 협업 (기초(과기), 임상(복지), 사업화(산업))
그린스마트스쿨 (시스템 협력형) 사업 틀 마련 + 연계 - 전체 구성(교육), 디지털(과기),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환경)	산업단지 고도화 (수요자 맞춤형) 부처·사업별 메뉴판 구성 →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 선택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업예산 적극 확대
 - 사업간 유사중복 제거, 부처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지출효율 제고
 - 정책지원 사각지대 해소,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재정성과 극대화

12대 중점과제 예산 30% 이상 확대

2021년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 성공적인 K-방역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
대한민국을 뒷받침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발 제 2

2021년도 예산안 -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21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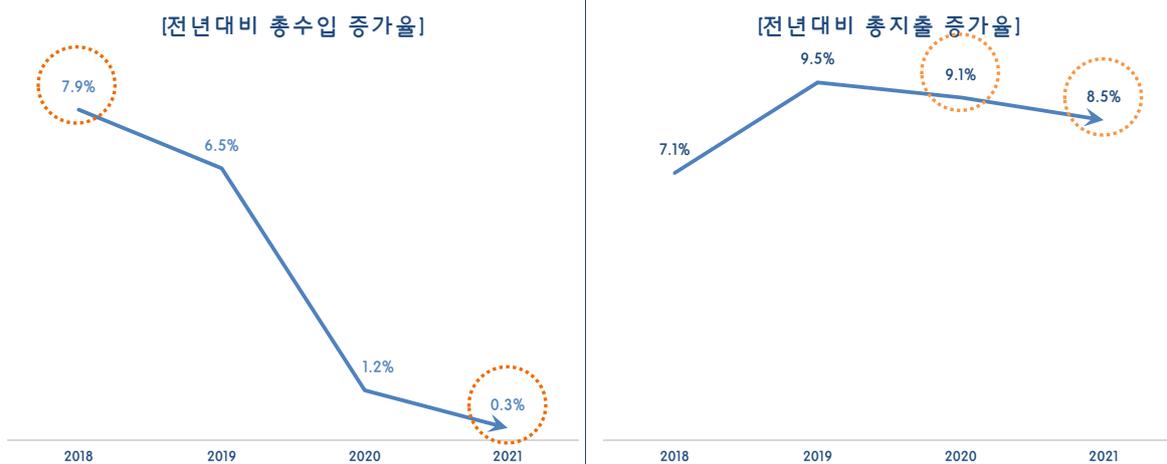
목차

- I 재정총량 분석
- II 주요 정책별 분석
- III 주요 유형별 분석
-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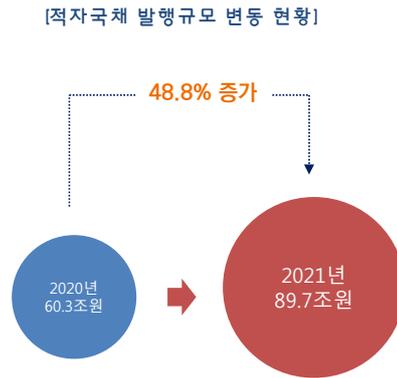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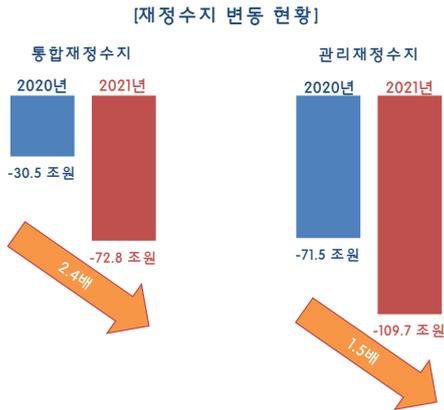
I. 재정총량 분석

I. 재정총량 분석

1. 2021년도 예산안 개요 - 총수입 ·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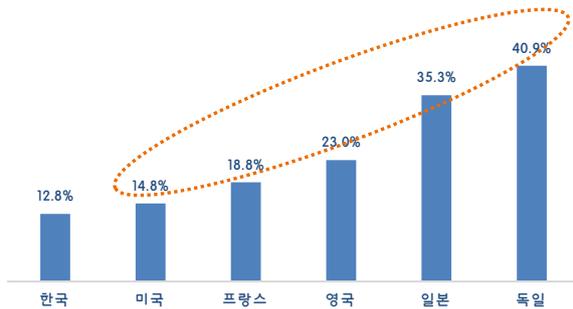


1. 2021년도 예산안 개요 - 재정수지 ·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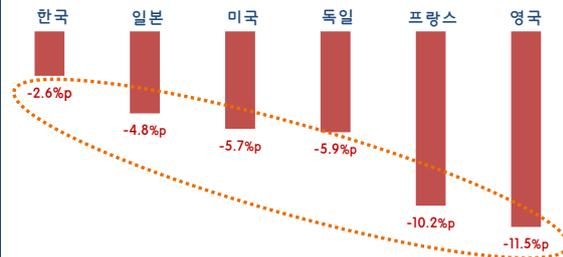
2. 재정기조 평가 -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주요국 코로나 대응 재정조치 규모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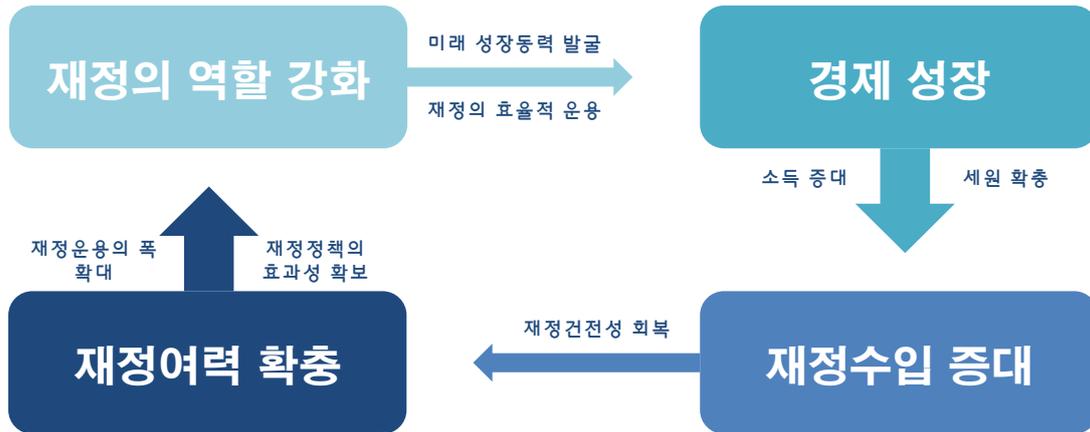
※ 국회예산정책처, <2020 주요국의 경제 현황 분석>, 2020.10., p.207.
(2020년 6월 기준, 예산/비예산 조치 포함)

[2020년 1~2분기 성장률의 전년동기대비 평균감소폭]



※ 평균감소폭 = ((2020년 1분기 전기대비성장률 - 2019년 1분기 전기대비성장률) + (2020년 2분기 전기대비성장률 - 2019년 2분기 전기대비성장률))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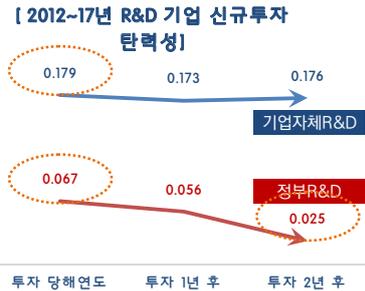
3.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 필요



II. 주요 정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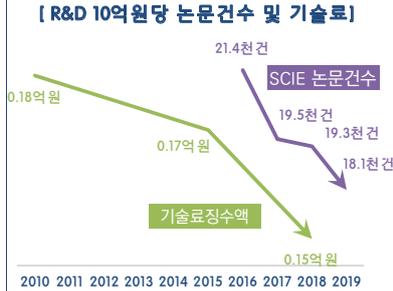
1.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책 - R&D 사업 분석

정부 R&D 민간 신규투자 유인 미흡
→ 기업자체 R&D 대비 신규투자 탄력성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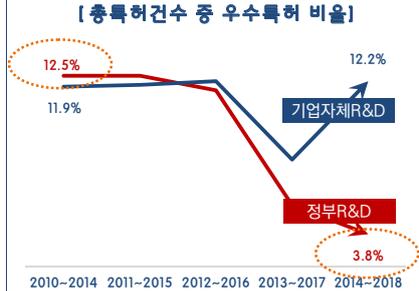


※ 기업 신규투자 탄력성: R&D 투입액 1% 증가시 기업 유형자산(토지제외)의 증가비율

기초연구 R&D 10억원당 논문건수 및 기술료 하락



우수특허 비율도 하락 추세
→ 민간 R&D 대비로도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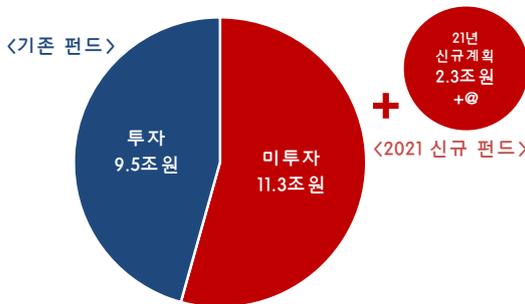
※ 우수특허: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 9개 등급 중 상위 3등급 이내 특허

2.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책 - 신성장투자 정책펀드사업 분석

신성장투자 정책펀드의 투자실적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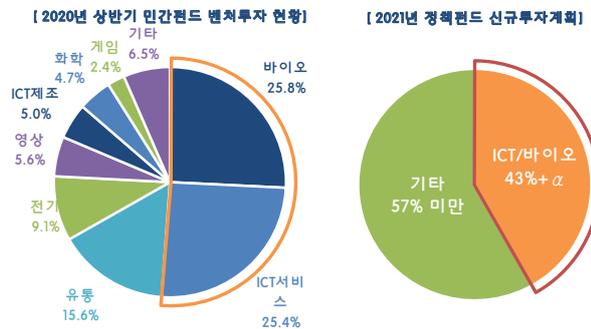
→ 기존 조성된 펀드 재원의 절반 이상(11.3원)이 미투자된 상황에서 2021년 신규 2.3조원+α 추가조성 계획

[2020년 9월 신성장투자 정책펀드 투자 현황]



신성장투자 정책펀드의 투자분야간 균형 확보 필요

→ 모태펀드(스마트대한민국펀드), 뉴딜펀드 등 주요 정책펀드의 중점 투자분야가 ICT서비스 및 바이오 업종에 편중



3.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책 - 교육재정구조 개편

교육재정구조 개편을 통하여 고등교육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최근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은 빠른 증가세

학생 수 및 교육 분야 지출 변화(2015~2020)



→ 한국은 학생당 공교육비가 초·중등교육에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고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에 미달
→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검토 필요

교육부문별 학생당 공교육비(2017)



4. 미래성장동력 확보 - 방위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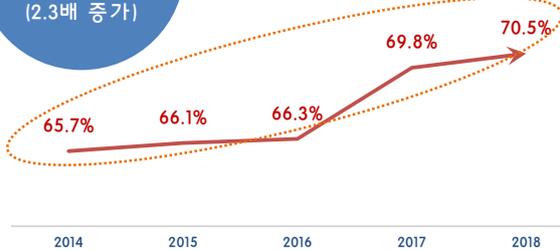
무기체계 국산화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 최근 국산화를 성과가 지속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되나 실질적인 국산화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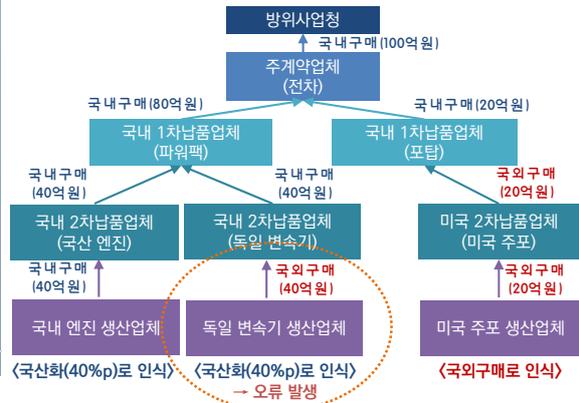
<수출 시장 점유율>

2010~14년 0.9%
→ 2015~19년 2.1%
(2.3배 증가)

[무기체계 국산화를 추이]



→ 현행 국산화를 지표는 무기도입시 2차 이상 납품업체가 국외구매한 것도 국산화로 인식하여 성과 과다산정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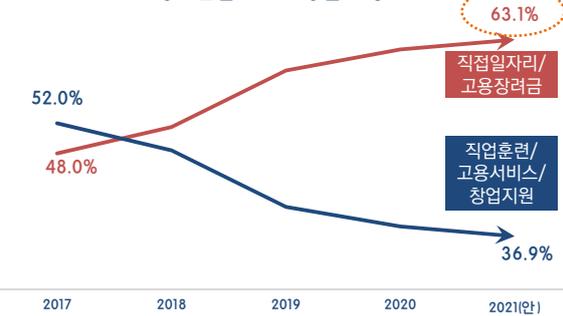


5.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직접일자리/고용장려금 비중 지속 증가

→ 중·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고용서비스/창업지원 등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비중 재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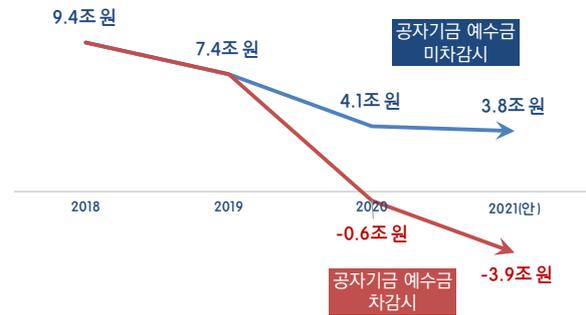
[재정지원일자리 유형별 비중 추이]



고용보험기금 재정구조 개선 필요

→ 2020년 사실상 적립금이 고갈되는 상황으로 재정구조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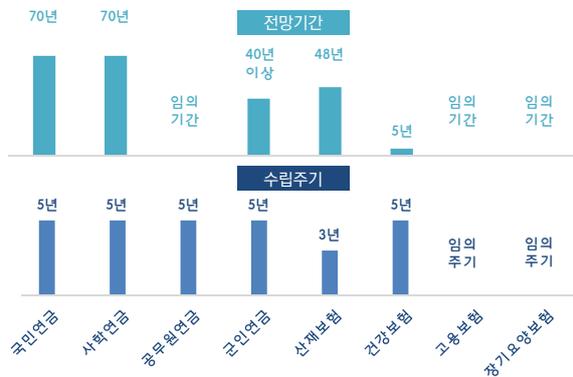
[고용보험기금 누적적립금 추이]



6.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 8대 공적 연금/보험 분석

8대 공적 연금/보험 재정전망 체계 통일성 확보 필요

→ 연금/보험별로 전망기간, 수립주기 등이 상이하여 총괄적인 재정소요 분석/관리에 어려움 존재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기금화 필요

→ 기금사업의 공적 성격, 재정악화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확대 및 국회 통제필요성 부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금화 방안 검토 필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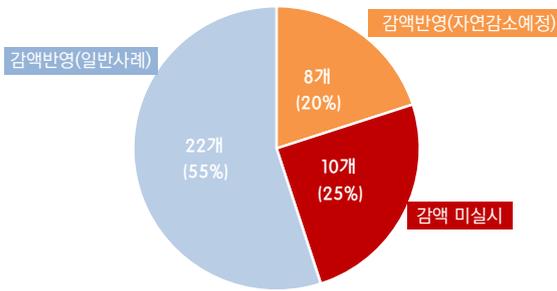


7.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 재난안전 사업 분석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결과 환류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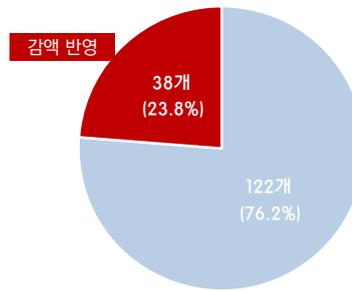
→ 2021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결과 다등급(투자축소) 사업 40개 중 실제 감액반영된 것은 22개 사업분

[2021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의 다등급 사업 현황]



→ 2021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결과 가등급(투자확대) 사업 160개 중 38개는 감액반영

[2021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의 가등급 사업 현황]



III. 주요 유형별 분석

1. 신규 재정사업 분석

2021년 예산안 신규사업 규모 4.2조원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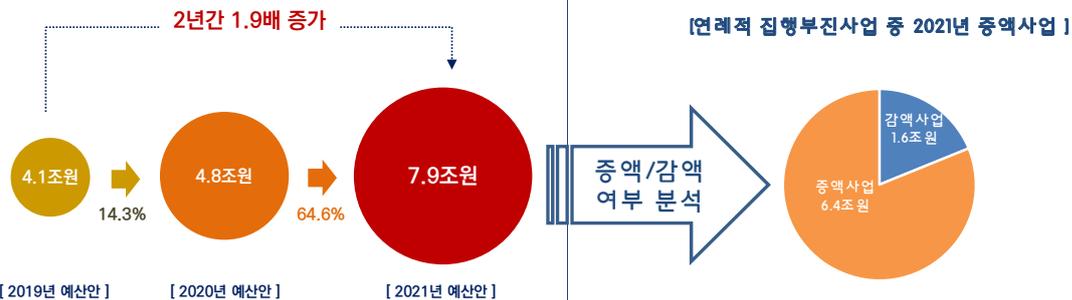
[주요 분석내용]

- ◆ 법적 근거 미흡
→ 파워반도체생산물플랫폼구축(산업부 40억원), 사학혁신지원(교육부 53억원) 등
- ◆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과기부 42억원) 산업은행 출자(금융위 6000억원) 등
- ◆ 과다편성 또는 집행부진 가능성
→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국토부 103억원), 감사기구 역량강화 (감사원 3억원) 등

2.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분석

연평균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7.94조원
→ 2019년 4.1조원, 2020년 4.8조원 대비 크게 증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 증액사업은 80.1%(6.4조원)
→ 국회에서 면밀한 심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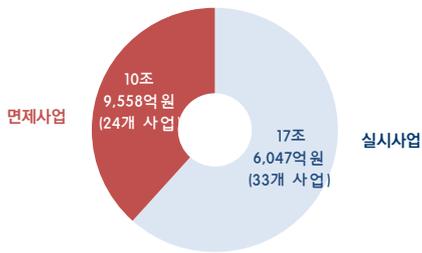
※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결산 기준 4년간 집행부진(평균 70% 미만) 사업 중 올해 9월말 기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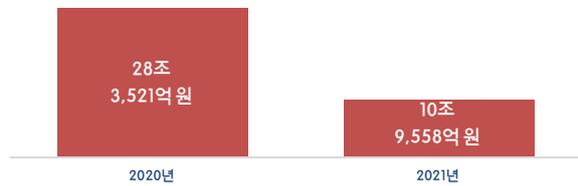
2021년도 예산안의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11.0조원

→ 2021년 예산안의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전체 대상사업의 38.4%

[예타 면제사업/실시사업 규모 비교]



[예타 면제사업 규모 비교]



4. 임대형 민자사업(BTL) 분석

BTL 한도액 급격한 증가

→ 2011년 이후 1조원 이하였으나 2021년 2.2조원으로 급증

[BTL 한도액 추이]



BTL 타당성조사 이행 미흡

→ 총 한도액 2.2조원의 58%인 1.3조원에 대해 타당성조사 절차 진행중 예산안 국회제출

[BTL 타당성조사 이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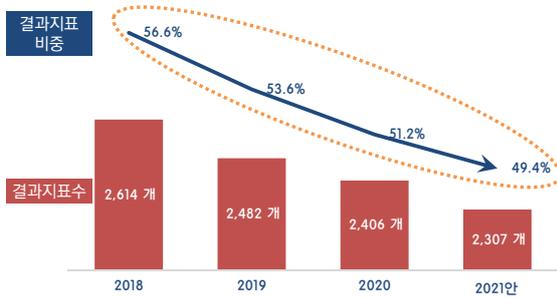
5.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분석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 비중 지속 감소

→ 2018년 56.6% → 2021년 49.4%

※ 성과지표의 유형: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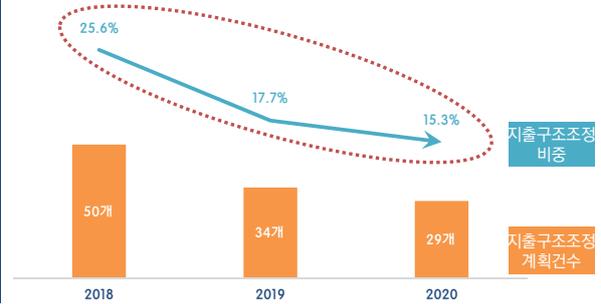
[단위사업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 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예산안 환류 미흡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비중 지속 감소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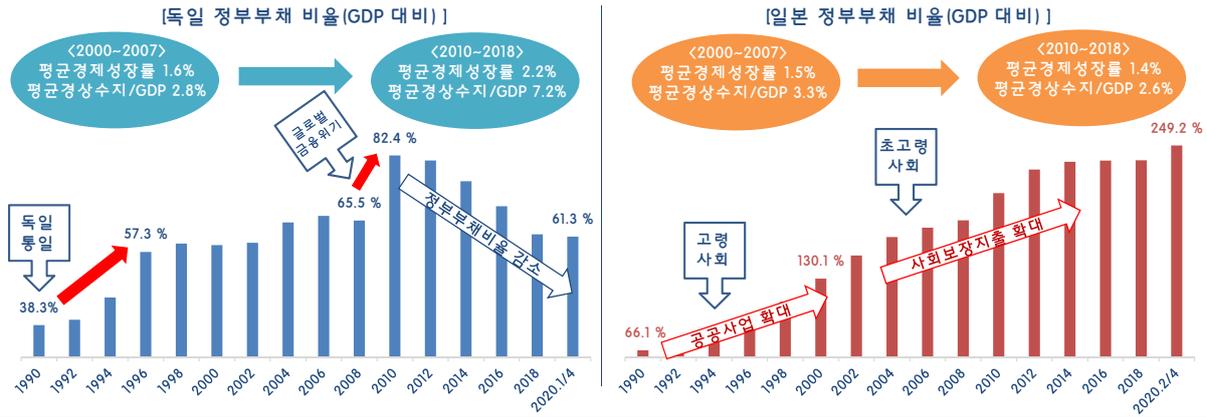


IV. 맺음말

1.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 필요 - 독일/일본 사례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가 정부부채비율 감축에 긍정적 영향

→ 반면, 일본은 성장률 저조 및 정부부채비율의 전반적인 증가세 유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 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은주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 론 1

토론 자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토론 자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I. 2021년 예산안총평 및 심사방향

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 최근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로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도 지속

○ 코로나19 글로벌 팬더믹으로 올해 세계경제는 최악의 경제침체 예상

* 세계 경제성장률(OECD, '20.9월) : ('20)△6.0 → △4.5% (한국 △1.0)

○ 대내적으로도 수출부진, 고용충격 등 경기둔화로 금년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1/2~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

* 성장률(전기비, %) : ('19.3/4) 0.4 (4/4) 1.3 ('20.1/4) △1.4 (2/4) △3.2

○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 경제위기와 구조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이 적극적 운영은 합리적인 국가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임

○ 재정의 적기투입을 통해 우리경제가 정상 성장경로 빠르게 복귀하고, 세입기반확충을 통해 재정이 회복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 필요함.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예산, 선도형 경제전환 예산** 등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할 예정

○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19라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코로나 피해 극복 및 민생지원 등을 위해 **59년 만에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총 67조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음**

* 1차 추경(3.17) : 11.7조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피해극복)

2차 추경(4.30): 12.2조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추경(7.3): 35.1조 (경제활력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4차 추경(9.22): 7.8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은 국제사회에서 권장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년 정책 대응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

○ IMF는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공공투자의 재정승수*가 크다면, 보건, 교육,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등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를 권고

* 공공투자 GDP대비 1% 확대시 GDP는 최대 2.7% 상승, 일자리는 2천~3천개 창출 가능

○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제한적이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하며, 회원국 중 최초로 '20년 성장률을 상향조정*했고 '21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유지도 권고했음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8) 및 OECD 중간경제전망(20.9) : $\Delta 1.2 \rightarrow \Delta 1.0\%$, '20년 성장 전망 OECD 국가 중 1위

○ 또한 IMF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는 GDP대비 3.5%로 G20국가 6.6%의 절반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한 나라로 자리매김

2. 확장적 재정운영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 시각에서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

☑️ '21년 예산안은 '20년(512.3조원)대비 8.5%증가, '20년 4차 추경(554.7조원)대비 0.2% 증가한 **555.8조원**

○ 확정적 재정기조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5.4\%$ ('20년 $\Delta 3.5\%$),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7.1% ('20년 39.8%)로 증가되었지만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키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

☑️ 코로나 위기과정에서 **국가채무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채무증가는 양호한 수준

○ OECD 국가의 채무비율은 110%수준(D2, '18년 확정치)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0% (D2)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재정여력도 높이 평가

○ 다만 최근 코로나 위기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증가속도가 예전보다 빨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점검해 볼 필요

3. Post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한국판 뉴딜은 당면한 위기극복·단기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Post-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근본 대책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확대되고 소비·교육·근무환경 등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기후변화 등 저탄소·친환경경제 요구에 대응하여 **그린경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이·전직 및 실업 등 보완하기 위한 사회·고용안정망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한민국 미래 대전환 프로젝트**임

- 이런 상황에서 뉴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로 보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선도 국가 도약’ 목표달성을 위해 ‘25년까지 시계에서 선제적으로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임

▣ 21년 예산에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사업을 위해 **21.3조원** 투자할 계획임

* 한국판뉴딜 투자계획(‘21~’25) : 160조원 (국비 114.1조원), 190.1만개 일자리

- **디지털 뉴딜 사업**은 데이터 구축, 지능형 정부 등 D.N.A 생태계 조성(5.4조),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0.1조), 의료·돌봄·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육성(0.5조), SOC디지털화(1.9조) 등 분야에 **7.9조원** 투자
- **그린 뉴딜 사업**은 녹색 생태계 복원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2.4조),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4.3조),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1.3조) 등에 **8.0조원** 지원
- **안전망 강화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4.7조),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농어촌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0.7조) 등 **5.4조원** 반영

▣ 데이터 댐, 그린 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 등에 뉴딜사업투자의 80% (17.0조원) 집중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임

- 대표과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원과 준비가 필요하며 이런 사업들을 통해 경제구조 대전환의 틀을 마련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친환경인프라 구축에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시 적극 협조할 것임

4. 내년도 예산은 4대 투자 중점 중심으로 재정지원 강화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소비·투자·수출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 본격 투자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투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1.2조, 국민취업지원제도 0.8조, 소비 바우처·쿠폰 0.5조 등

▣ R&D·인재 등 혁신지원 생태계조성과 함께, DNA·BIG3·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성장 동력** 적극 확보

* 소재·부품·장비 2.2조, BIG3 2.3조, 인재양성 0.3조, 혁신금융 2.1조, DNA 3.1조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보호 및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 등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추진

○ 복지 분야 증가율은 4년 연속 두릿수 증가율로 내년(10.7%)에도 역대 최초로 200조원 수준을 복지분야에 투자함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정책을 뒷받침

* 생계급여 4.6조, 의료급여 7.7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9.5조, 노인장기 요양보험 1.5조

☑ K-방역, 수해예방 등 국민생명보호, 생활환경 청정화 등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투자 확대

* 예방-진단-치료 방역시스템 구축 0.6조, 수리시설 개보수 0.6조, 하천보수 0.8조

5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예산

☑ 2021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코로나 위기를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정책의지가 보임

☑ 2021년 예산안은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평가

☑ 내년 예산이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인식하에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코로나 19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선도형경제로 전환하는 데 미중물이 되기를 기대함

II. 2021 예산안 개요

1. 재정 총량

☑ (총지출)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

☑ (총수입) 전년 대비 0.3% 증가한 483.0조원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악화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감소

☑ (재정수지·국가채무) 수지적자 확대, 국가채무 증가

○ GDP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악화(△3.5 → △5.4%)

○ GDP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증가 (39.8 → 46.7*%)

* 4차 추경 반영시 47.1%

〈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조원, %)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4차 추경		
◇ 총지출	512.3	554.7	555.8	43.5
(증가율)	(9.1)	(18.1)	(8.5)	
◇ 총수입	481.8	470.7	483.0	1.2
(GDP대비, %)	(1.2)	(△1.1)	(0.3)	
◇ 재정수지	△71.5	△118.6	△109.7	△38.2
(GDP대비, %)	(△3.5)	(△6.1)	(△5.4)	(△1.9%p)
◇ 국가채무	805.2	846.9	¹⁾ 945.0	139.8
(GDP대비, %)	(39.8)	(43.9)	(46.7)	(6.9%p)

1) '20년 4회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분 반영시(+7.5조원) :
'21년 예산안 국가채무는 **945.0조(46.7%) → 952.5조원(47.1%)**으로 증가

2.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 **(복지·일자리)** 최대 증액 (+19.4조, 10.7%) (180.5 → 199.9조원)으로 200조원 수준, 총지출 대비 비중 35.2 → 36%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해소, 국민취업제도 시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10.7%)

- ▣ **(산업)** 최고 증가율 분야 22.9% (23.7 → 29.1조원)
 -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투자로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 ▣ **(환경)** '20년 대비 큰폭(16.7%)으로 증가 (9.0 → 10.5조원)
 -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공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중심으로 투자 확대

- ▣ **(SOC)** '20년 대비 큰폭(11.9%)으로 증가 (23.2 → 26.0조원)
 - SOC디지털화·그린리모델링 등 뉴딜 투자, 노후 SOC 안전투자 등 디지털·안전투자 중심으로 2년 연속 높은 증가세 유지

▣ (R&D) '20년 대비 큰폭(12.3%)으로 증가 (24.2 → 27.2조원)

○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BIG3, 소재부품 장비 등 미래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확대

▣ (국방) '20년 대비 적정(5.5%)수준으로 반영 (50.2 → 52.9조원)

○ 국방 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 강국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확대

〈 참고 1 〉 분야별 재원재분모습

(조원)

구분	'20년(A)	'21년 정부안(B)	증감 (B-A)	%
◆ 총지출	512.3	555.8	43.5	8.5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4	10.7
※ 일자리	25.5	30.6	5.1	20.0
2. 교육	72.6	71.0	△1.6	△2.2
(교부금 제외)	(17.2)	(17.7)	(0.5)	(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4	53.3	△2.1	△3.7
3.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4. 환경	9.0	10.5	1.5	16.7
5. R&D	24.2	27.2	3.0	1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5.4	22.9
7. SOC	23.2	26.0	2.8	11.9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9. 국방	50.2	52.9	2.7	5.5
10. 외교·통일	5.5	5.7	0.2	4.3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7.5	9.5
(교부세 제외)	(26.8)	(34.8)	(8.0)	(29.7)
※ 지방교부세	52.2	51.8	△0.4	△0.8

〈참고 2〉 '20-21년 재정총량

(조원, %)

구분	'20년 본예산	'21년 정부안
□ 총수입	481.8	483.0
(증가율, %)	(1.2)	(0.3)
- 국세	292.0	282.8
-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95.8	99.5
- 기타	94.0	100.7
□ 총지출	512.3	555.8
(증가율, %)	(9.1)	(8.5)
-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	54.8	62.6
- 기타	457.5	493.2
□ 통합재정수지	△30.5	△72.8
(GDP대비 %)	(△1.5)	(△3.6)
□ 관리재정수지	△71.5	△109.7
(GDP대비 %)	(△3.5)	(△5.4)
□ 국가채무	805.2	945.0 ¹⁾
(GDP대비 %)	(39.8)	(46.7)

1) '20년 4회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분 반영시(+7.5조원) :

'21년 예산안 국가채무는 945.0조(46.7%) → 952.5조원(47.1%)으로 증가

〈참고 3〉 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 총지출 추이

(조원, %)

본예산		'17		'18		'19		'20		'21	'22	'23	'24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본예산
총지출	규모	400.5	410.1	428.8	432.7	469.6	475.4	512.3	554.7	555.8	589.1	615.7	640.3
	증가율*	3.7		7.1		9.5		9.1		8.5	6.0	4.5	4.0

*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 재정수지 추이

(조원, %)

	'17	'18	'19	'20					'21	'22	'23	'24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 통합재정수지	24.0	31.2	△12.0	△30.5	△41.5	△48.9	△76.2	△84.0	△72.8	△83.7	△87.9	△88.1
(GDP대비)	(1.3)	(1.6)	(△0.6)	(△1.5)	(△2.1)	(△2.5)	(△3.9)	(△4.4)	(△3.6)	(△4.0)	(△4.0)	(△3.9)
□ 관리재정수지	△18.5	△10.6	△54.4	△71.5	△82.0	△89.4	△111.5	△118.6	△109.7	△123.2	△128.2	△127.5
(GDP대비)	(△1.0)	(△0.6)	(△2.8)	(△3.5)	(△4.1)	(△4.5)	(△5.8)	(△6.1)	(△5.4)	(△5.9)	(△5.9)	(△5.6)

○ 국가채무 추이

(조원, %)

	'17	'18	'19	'20					'21	'22	'23	'24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 국가채무	660.2	680.5	723.2	805.2	815.5	819.0	839.4	846.9	952.5	1077.8	1203.8	1334.5
(GDP대비)	(36.0)	(35.9)	(37.7)	(39.8)	(41.2)	(41.4)	(43.5)	(43.9)	(47.1)	(51.2)	(55.0)	(58.6)

〈참고 4〉 OECD '20.9월 「중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

(단위 %)

	'19년	'20년	'21년
세계	2.6	△4.5	5.0
G20	2.9	△4.1	5.7
유로존	1.3	△7.9	5.1
중국	6.1	1.8	8.0
한국	2.0	△1.0	3.1
터키	0.9	△2.9	3.9
인도네시아	5.0	△3.3	5.3
미국	2.2	△3.8	4.0
호주	1.8	△4.1	2.5
독일	0.6	△5.4	4.6
일본	0.7	△5.8	1.5
캐나다	1.7	△5.8	4.0
브라질	1.1	△6.5	3.6
사우디	0.4	△6.8	3.2
러시아	1.4	△7.3	5.0
프랑스	1.5	△9.5	5.8
영국	1.5	△10.1	7.6
멕시코	△0.3	△10.2	3.0
인도	4.2	△10.2	10.7
이탈리아	0.3	△10.5	5.4
아르헨티나	△2.1	△11.2	3.2
남아공	0.1	△11.5	1.4

〈참고 5〉 일반 정부부채(D2) 비율비교

(단위: %)

	일반정부 부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29.8	34.1	35.6	39.5	40.7	42.7	43.6	43.5
오스트리아	96.7	104.6	101.6	109.3	108.9	108.5	102.0	96.6
벨기에	111.6	121.0	118.6	130.6	126.4	127.7	120.6	118.5
캐나다	89.4	93.5	90.4	92.4	98.0	98.4	95.2	93.8
체코	48.9	58.4	58.1	55.4	52.0	47.8	43.9	40.4
덴마크	60.1	60.6	56.7	59.1	53.4	51.4	49.1	47.8
에스토니아	9.4	13.0	13.5	13.7	12.6	13.5	13.0	12.7
핀란드	56.8	63.5	64.9	71.0	74.6	75.6	73.8	72.7
프랑스	102.7	110.9	111.3	119.0	119.5	124.2	123.2	121.6
독일	87.5	90.4	85.5	85.4	81.5	78.6	74.1	70.3
그리스	112.4	167.5	185.1	185.9	185.9	189.4	191.7	195.8
헝가리	96.2	99.3	98.2	101.2	99.5	99.7	94.1	88.0
아이슬란드	94.4	92.1	84.2	77.0	70.1	64.4	63.4	62.1
아일랜드	114.5	132.1	133.6	122.7	89.8	85.9	77.4	76.0
이스라엘	68.8	68.5	67.1	65.8	63.8	62.0	60.5	60.9
이탈리아	118.7	137.3	144.8	157.9	158.7	156.1	153.0	148.3
일본	201.8	209.2	212.4	217.9	216.5	223.0	222.2	224.2
한국(D2)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라트비아	48.6	48.5	46.5	50.1	45.1	49.1	45.9	44.3
리투아니아	45.8	51.3	48.9	52.6	53.4	50.9	47.0	40.9
룩셈부르크	27.6	30.0	30.5	30.9	30.7	28.1	29.9	29.0
네덜란드	73.8	79.5	78.9	83.3	79.5	77.5	70.7	65.7
뉴질랜드	40.2	41.3	40.3	40.5	40.2	37.7	35.7	34.1
노르웨이	34.7	36.0	36.6	35.1	40.5	44.5	44.9	45.8
폴란드	61.5	64.7	65.4	70.8	70.1	73.0	68.6	66.9
포르투갈	111.5	139.4	142.8	152.8	150.2	146.0	145.1	138.4
슬로바키아	51.3	60.6	65.2	67.6	66.2	67.8	65.7	63.6
슬로베니아	51.4	62.0	80.1	99.6	102.8	97.8	89.4	84.1
스페인	78.6	93.5	106.6	119.5	117.1	117.4	115.8	114.7
스웨덴	47.3	47.7	50.3	57.3	55.1	54.4	51.7	50.2
스위스	43.1	43.9	43.1	43.3	43.3	42.1	42.9	41.1
영국	103.5	107.5	103.3	113.3	112.9	122.6	119.9	116.6
미국	99.6	103.1	104.6	104.3	104.6	106.6	105.7	106.7
OECD 평균	101.6	107.7	108.8	111.8	111.1	112.4	110.1	108.9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7('20.6월)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 론 2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 론 3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이은주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과도한 재정건전성 논란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발표(2020년 10월 5일)
 -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
 -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은 2016년도에도 있었음. 그 당시에는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건전성을 강제하려고 하였음.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2016년 8월 10일)를 통한 채무·수지준칙 법제화 시도
 -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3이하로 유지
- Richard Musgrave(1959)는 정부의 3대 기능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거시경제안정(활성화)을 꼽았음.
 - 또는 위 3가지 기능을 재정의 역할이라고도 함(국회 예산정책처)
- 현 시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밖에 없음.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
 - 고용과 내수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음.
 -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 이로움.
-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관리 방침인 재정준칙은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주장과 같음.

- 또한, 준칙 적용 완화 방안의 경우 불필요한 정쟁의 원인을 제공
 -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으로 ‘경제 위기’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추경 편성 시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정쟁이 계속 발생했음.
 - 추경편성요건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한도 면제나 완화 시 불필요한 정쟁의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다른 측면에서는 행정부에 의해 예외적 조건들이 남발되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위한 재원은 경기 호황기 때 과감한 증세 전략을 통한 자원 확보 방안이 시행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5~6% 정도 낮은 점을 감안하여 증세를 통한 자원 마련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전혀 새롭지 않은 한국판 뉴딜

- 정부는 지난 5월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
 - 7월 14일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

-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
 -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 주장

-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뉴딜 사업
 - 정부가 정의당에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세부사업 + 내역사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 신규사업보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기재부 제출 자료 기준).
 - 기존의 사업을 포함한 뉴딜 규모 발표는 사업의 규모를 크게 보이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며, 창조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들의 실패한 정책 추진 방법과 유사.

〈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신규사업 현황 〉

(단위: 개)

분야	총 사업수	신규사업수	신규사업비율
그린뉴딜	201	58	28.9%
디지털뉴딜	383	107	27.9%
안전망강화	56	24	42.9%
합계	640	189	29.5%

○ 탄소 제로에 구체적 계획이 없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2020년-2025년까지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 개 창출을 주장

- 정부의 그린뉴딜은 탄소제로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판 뉴딜 사업 중 그린뉴딜 분야의 경우 기존 사업의 비중이 71.1%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큼.

○ 한국판 뉴딜 사업 목록의 문제

①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제출

- 이런 식의 자료 제공은 사업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하여 정확한 정책 분석에 장애를 조성하게 됨.
- 아래 표에 있는 4개의 사업은 각각 2개 이상의 사업이 묶여 있어 정확히 어떤 항목이 뉴딜의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능

(단위: 억원)

부처명	사 업	21년 정부안
복지부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6,442
복지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소득보장(기초·장애인연금제도 개선)	9,178
복지부	보험정책사업관리(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비)	1,500
복지부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연구용역)	8,160
복지부	차상위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200

② 사업명 바꿔치기로 뉴딜을 과대 포장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사업목록의 사업명과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 상의 사업명이 불일치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보기 어려움.
- 의도가 어땠든 부처가 제출한 사업명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혼란을 일으키고 정확한 예산안 분석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사업명이 다른 사업 목록 〉

기획재정부 제출 사업명	예산안 설명자료 사업명
IoT·AI 기반 신데이터 댐 구축	IoT-AI 기반 시설물 스마트 관리
문화기술 연구개발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물류시설 스마트 재생 및 공동화지원	노후물류기지스마트재생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 (만성질환 관리 자가 측정기기 지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운영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정부서비스 구현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선박용 LNG 혼소와 무탄소 연료 적용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성장지원 (KIURI)	인재활용확산지원

□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 된다고 주장
 - 실제 한국판 뉴딜 사업 목록에서 토건사업은 보이지 않음.
-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시중의 유동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민자사업에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기존의 사업 대상보다 범위 확대, 펀드 조성, 민간사업자 운영기한 연장 등을 발표함.
 - 총 30조원+@ 규모의 민자유치를 통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에 활용 +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

○ 2021년 임대형민자사업 총한도액의 대폭 증액

-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은 2020년 5,479억 원 대비 321.5% 증가한 23,096억 원임.
- 이 가운데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11,077억 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의 한도액은 10,919억 원, 예비한도액은 1,100억 원

〈 2021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 〉

(단위:억 원)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
총한도액	5,479	23,096	17,617	321.5
◇국가사업	5,218	11,077	5,859	112.3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10,919	10,919	-
◇예비한도액	261	1,100	839	321.5

○ 정부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이미 10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표했음.(주요 교통망 5.0조원, 완충저류시설 2.0조원, 항만관련 개발 0.9조원,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1.5조원)

- 추가적으로 7조 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12조 7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조달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음.

- 민자사업 방식의 자원 조달은 당장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착시 현상으로 인해 무분별한 투자를 촉발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급금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나 수익형 민자시설에 따른 국민들의 추가적인 이용료 부담이 발생함.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 론 4

한국재정, 건전성 혹은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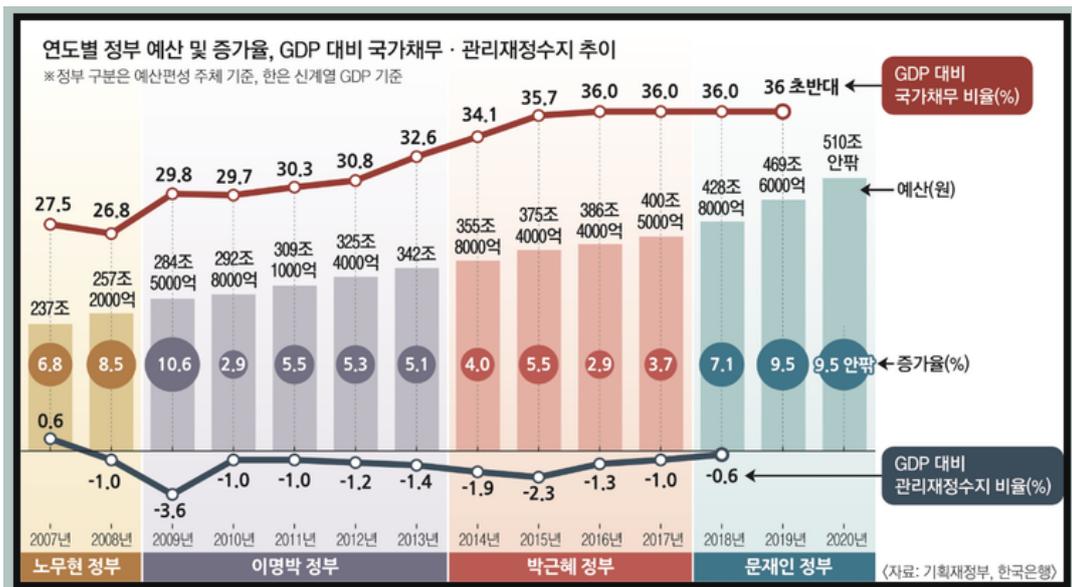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재정, 건전성 혹은 지속가능성?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 재정건전성 논란

매년 초슈퍼예산?
정치화된 재정건전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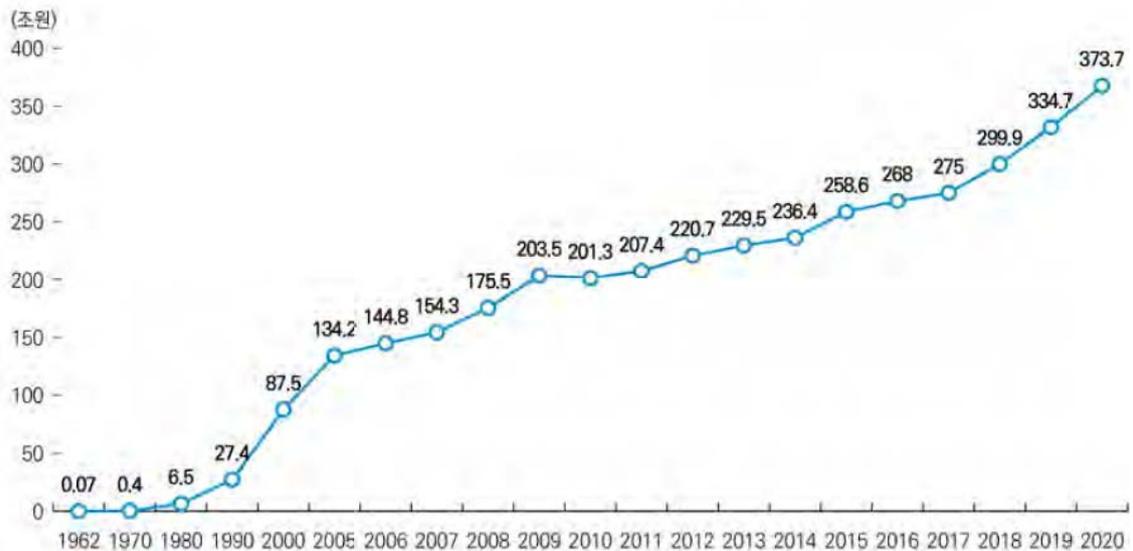


재정수지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9년 이후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연도별 지출 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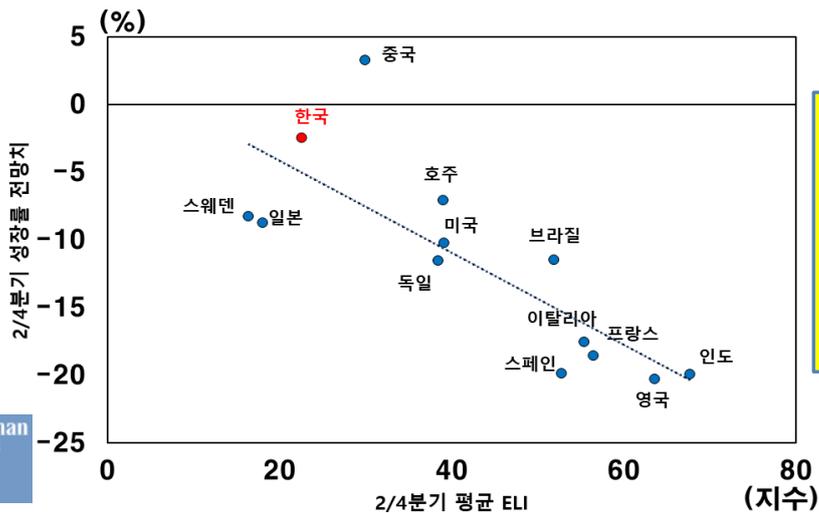
주: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9년 이후는 예산(추경) 기준
 자료: 1. 대한민국재정,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각연도
 2. 기획재정부

OECD 전망보고서 2020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세계 1위 한국”

한국	-1.2	독일	-6.6
중국	-2.6	미국	-7.3
일본	-6.0	프랑스	-11.4
OECD평균	-7.5%	영국	-11.5%

자료 : 'OECD outlook No.106, No.107' 2020.6. single-h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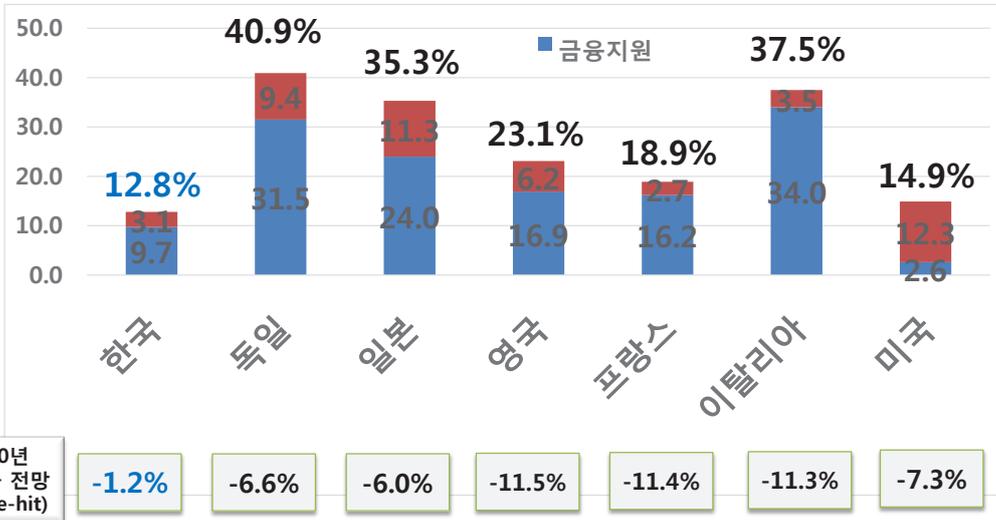
주요국 2/4분기 이동제한조치 강도와 성장률 전망치



**K-방역,
봉쇄 없이
국민 지키며
경제도 살렸다**

주1)골드만 삭스의 이동제한조치 강도 지수(Effective Lockdown Index) 기준
2)전년동기대비 %, 블룸버그 서베이 중위값 기준(중국은 실적치) 자료:Goldman Sachs, Bloomberg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GDP대비 지출 비교(재정/금융)



자료: IMF Fiscal Monitor –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0.6.12)

코로나 전 후 GDP 대비 재정수지 변동치 비교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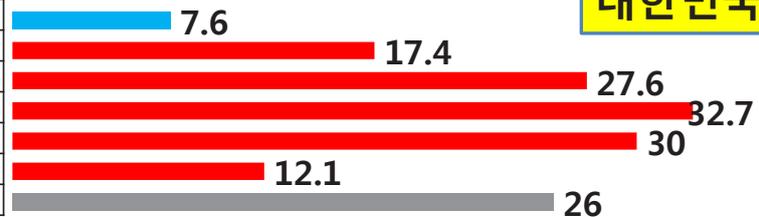
자료 : IMF Fiscal Monitor (6월)

	'19(A) 실적치	'20(B) 전망치
한국	0.4	-3.6
독일	1.5	-10.7
프랑스	-3	-13.6
미국	-6.3	-23.8
일본	-3.3	-14.7
중국	-6.3	-12.1
선진국 평균	-3.3	-16.6



코로나 전 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D2) 변동치 비교 (%p)

	'19(A) 실적치	'20(B) 전망치
한국	41.9	49.5
독일	59.8	77.2
프랑스	98.1	125.7
미국	108.7	141.4
일본	238	268
중국	52	64.1
선진국 평균	105.2	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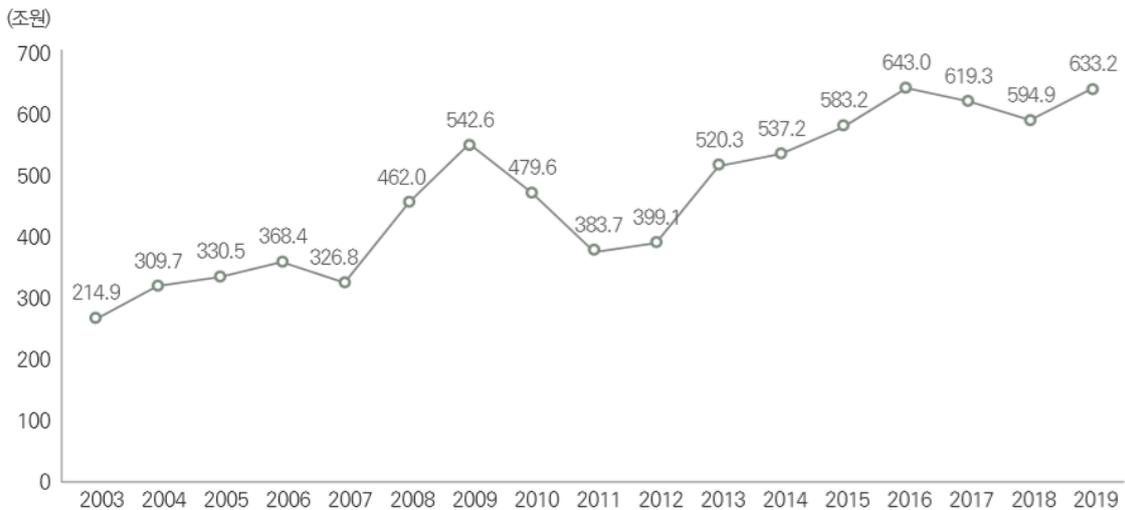


**K-재정,
재정여력
확보한
대한민국**

2. 재정혁신 - 봉토주의(할거주의) 우정사업의 공익을 위한 부담 (2019년 기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출	500억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632억
우체국예금특별회계			6,990억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220억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650억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86억

기금 연도별 지출순액



❖ 정부기금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기금명
사업성 기금 (38개)	복지, 노동 (12개)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보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산업, 과학 (13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축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쌀소득보전기금, 농작물재해보험기금
	교육, 문화 (13개)	국민체육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방송발전기금, 사학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제교류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해지원기금,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금기금	연금 (4개)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금융성 및 계정성 기금	보증, 보험 (13개)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출보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정부의 은닉된 팽창

11

2006년 국가재정법의 의의와 기금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 예산회계법과 국가기금관리법의 통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통합 관리를 강조함 (제81조)
- 프로그램 예산과목 체계에서 통합 관리함

※ 기금 운영의 개선

- 매년 전체 기금의 1/3씩 경영과 사업 평가
- 3년마다 기금의 존치 평가
- 기금평가단 구성

기금 설치의 요건 규정(국가재정법 제14조)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예: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 운영)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예: 남북협력기금)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예: 정보통신진흥기금)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12

3.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의 역사성

1970년대 고도성장	- 재정 팽창과 재정 적자 -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활동 강화
1980년대 안정화 정책	- 재정 건전화 - 동결예산
1997년 외환위기	-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 예산 감시를 위한 시민 운동
2006년 국가재정법	- 재정건전화법 - 투명, 참여, 공개
2016년 ?????	- 재정 정상화의 과제는 ????

새로운 환경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결정 변수

세입

- 경제성장률
- 양극화 위협
- 국세수입
- 조세부담율

세출 수요 관리

- 저출산
- 고령화
- 경직성 경비
- 국가경쟁력

재정 성과

- 채무 관리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건전 재정관리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37.1	36.6	35.6	36.0	35.6	35.7	35.7	36.4	36.1	35.7
오스트리아	54.5	53.1	51.1	51.5	51.3	52.7	51.6	51.1	50.5	50.1
벨기에	54.1	53.3	54.4	55.8	55.7	55.1	53.9	53.2	52.6	52.1
캐나다	43.5	43.2	41.7	41.0	40.3	39.0	40.4	41.1	41.1	41.0
체코	43.6	43.0	43.0	44.5	42.6	42.2	42.0	40.4	40.6	40.2
덴마크	56.5	56.7	56.4	58.0	55.8	55.3	54.8	55.4	55.1	54.5
에스토니아	46.0	40.5	37.4	39.3	38.5	38.5	40.3	40.0	40.1	39.7
핀란드	54.8	54.8	54.4	56.2	57.5	58.1	57.7	57.5	57.1	56.7
프랑스	56.8	56.5	55.9	56.8	57.0	57.3	57.0	56.5	56.2	56.0
독일	47.6	47.4	44.8	44.3	44.6	44.3	44.0	44.3	44.5	44.3
그리스	54.1	52.4	54.3	55.4	62.4	50.6	55.5	52.3	52.2	51.6
헝가리	50.6	49.5	49.7	48.6	49.3	49.0	50.0	49.9	49.8	49.8
아이슬란드	48.4	49.3	45.7	45.4	43.9	45.3	42.9	41.4	40.5	40.0
이탈리아	47.1	66.3	46.0	41.8	39.8	37.8	29.5	28.0	27.0	26.3
이스라엘	42.2	41.1	40.5	41.4	41.0	40.7	39.7	39.3	39.7	39.8
이탈리아	51.2	49.9	49.4	50.8	50.8	50.9	50.4	49.5	49.0	48.8
일본	41.9	40.7	41.8	41.8	42.4	42.0	41.3	41.0	40.9	39.8
대한민국	34.9	31.1	32.4	32.7	31.8	32.0	32.4	31.9	31.6	31.5
리투아니아	43.7	44.8	39.1	37.1	37.0	37.5	37.1	37.1	37.4	36.9
룩셈부르크	46.1	44.4	42.7	44.3	43.5	42.4	42.2	42.4	41.5	40.9
네덜란드	48.2	48.2	47.0	47.1	46.3	46.2	45.1	44.7	43.9	43.9
뉴질랜드	41.8	47.8	44.8	43.6	42.8	42.0	42.1	41.0	40.0	39.2
노르웨이	46.1	45.0	43.8	42.9	44.0	45.9	48.8	51.0	52.1	52.6
폴란드	44.9	45.7	43.8	42.7	42.4	42.1	41.5	41.7	42.4	42.5
포르투갈	50.2	51.8	50.0	48.5	49.9	51.8	48.4	46.2	45.9	45.7
슬로바키아	44.1	42.1	40.8	40.6	41.4	42.0	45.6	43.6	43.0	42.1
슬로베니아	48.2	49.3	50.0	48.6	60.3	50.0	47.8	45.5	44.4	42.9
스페인	45.8	45.6	45.8	48.1	45.6	44.9	43.8	42.8	41.8	40.7
스웨덴	53.1	51.3	50.7	51.7	52.4	51.5	50.3	50.3	49.9	49.3
스위스	33.1	32.9	32.9	33.3	34.1	33.8	33.9	34.3	34.6	34.7
영국	48.5	48.2	46.6	46.5	44.9	43.7	43.1	41.3	40.9	40.5
미국	43.2	43.2	42.0	40.2	38.9	38.2	37.9	38.0	37.8	37.3
유로지역 (16개국)	50.7	50.6	49.2	49.8	49.7	49.4	48.6	48.1	47.7	47.4
유로지역 (15개국)	50.7	50.6	49.2	49.8	49.8	49.4	48.6	48.1	47.7	47.4
OECD 평균	44.4	44.0	43.1	42.6	42.0	41.4	41.1	40.8	40.5	40.1

OECD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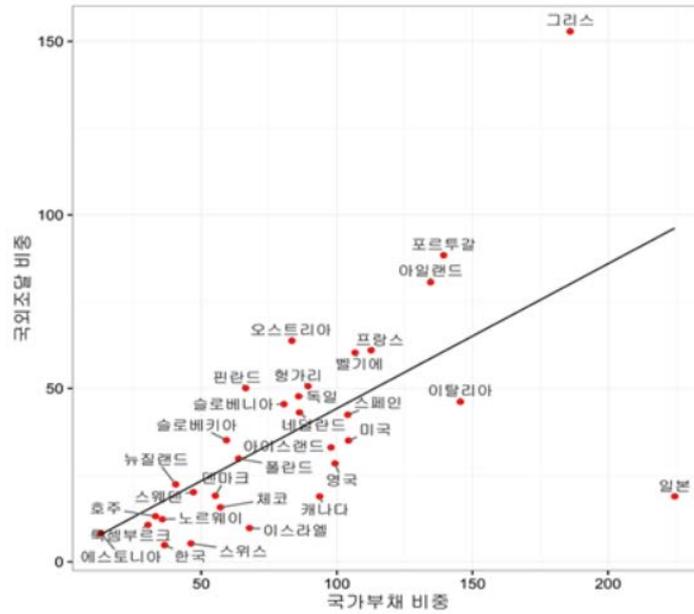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한민국	187 248	17.9 24.3	180 24.6	185 25.2	194 26.3
미국	18.6 24.1	19.5 25.7	19.7 25.9	20.0 26.2	19.8 26.0
영국	26.5 32.8	26.5 32.6	26.2 32.2	26.4 32.5	26.9 33.2
프랑스	27.8 44.3	28.5 45.2	28.4 45.3	28.5 45.2	28.5 45.3
독일	22.5 36.4	22.9 36.8	22.9 36.8	23.1 37.1	23.4 37.6
일본	16.5 28.2	17.1 28.9	18.3 30.3	18.6 30.7	- -
스웨덴	32.4 42.6	32.9 42.9	32.7 42.6	33.6 43.3	34.1 44.1
노르웨이	32.2 41.5	30.4 39.9	28.9 38.9	27.8 38.3	27.4 38.0
핀란드	30.0 42.7	31.0 43.6	31.2 43.6	31.2 43.9	31.3 44.1
덴마크	45.4 45.5	45.8 45.9	48.5 48.6	45.8 45.9	45.9 45.9
OECD 평균	24.4 33.3	24.6 33.6	24.9 33.9	25.0 34.0	- 34.3

주 1. 각국의 첫 번째 줄은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주 2. 각국의 두 번째 줄은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원배분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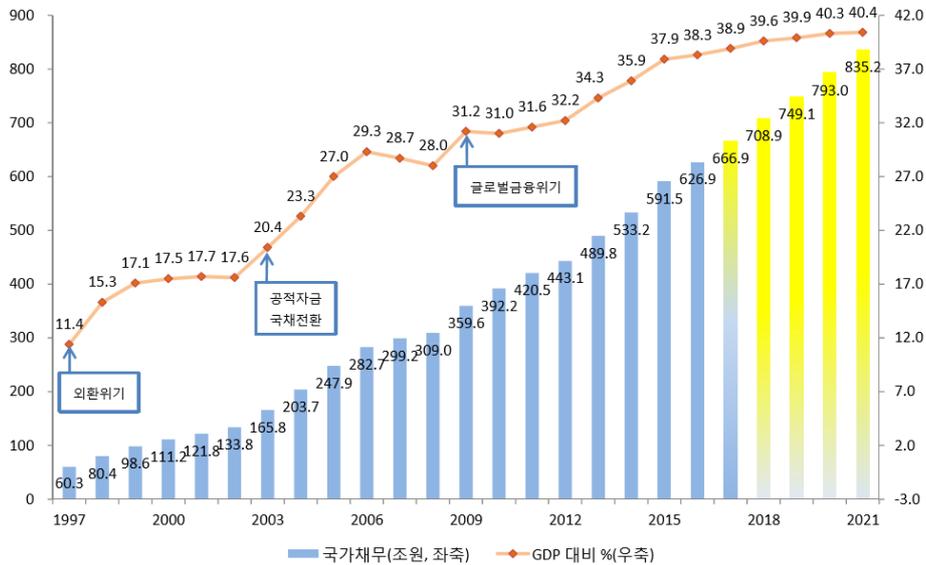


OECD 일반정부 부채의 국외조달 비중(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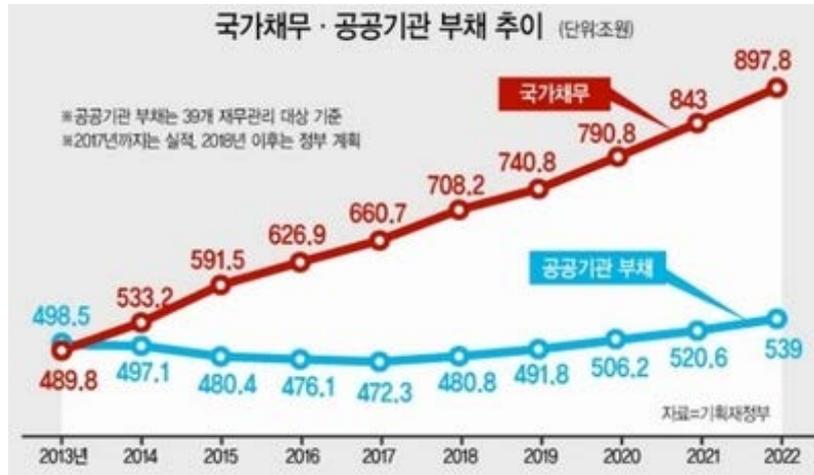


자료: Fall, Bloch, Fournier and Hoeller (2015).

90년대 이후의 국가채무



[국감현장]홍남기 부총리 "국가 부채비율 40% 돌파 불가피"



3. 재정분야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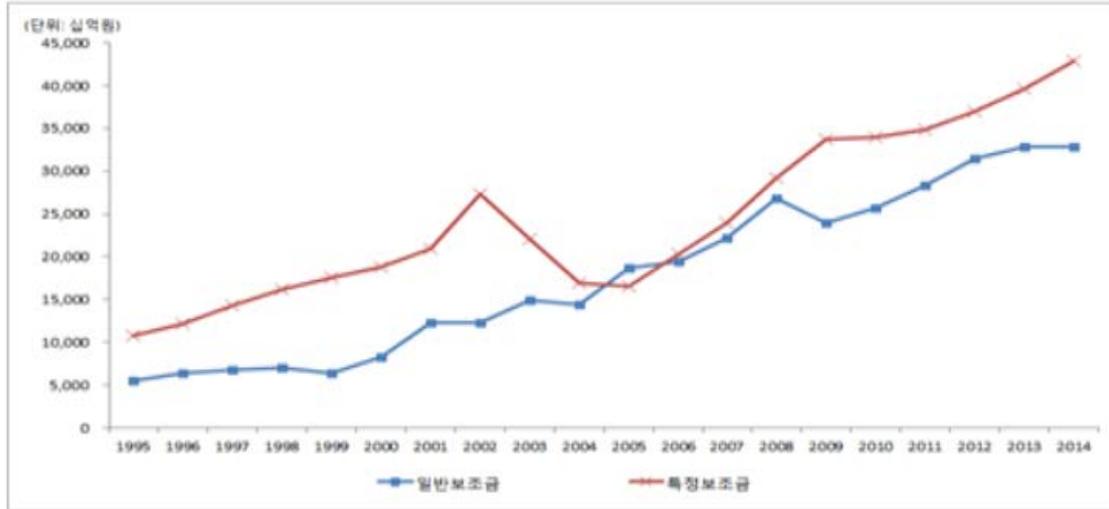
1. 재정 제도의 간소화 (재정 정상화는 단순화로 부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
- 사업성 기금의 적립금 재검토,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 계정성 기금의 적정성 재검토

2. 재정의 수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

- 융자성 자금의 이차보전 전환 ; 저금리 시대에 대응, 공급 과잉
- 출자의 적정성 ;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 보조의 타당성 ; 도덕적 해이의 유발
- 보증의 적정성 ; 과잉 출연금의 회수
- 출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규모 변화(1995-2014)



국고보조금의 개혁 과제

● 총괄 관리 부서의 역할이 부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대상 사업 115개 나열
 - 국고보조금 사업 수 : ('05년) 359개 → ('13년) 956개
- '기타 협의에 의해 운영할 수 있다' 는 규정에 근거한 사업이 1/3
- 지자체 '일단 받고 보자' → 보조금 부풀리기 등 방만 사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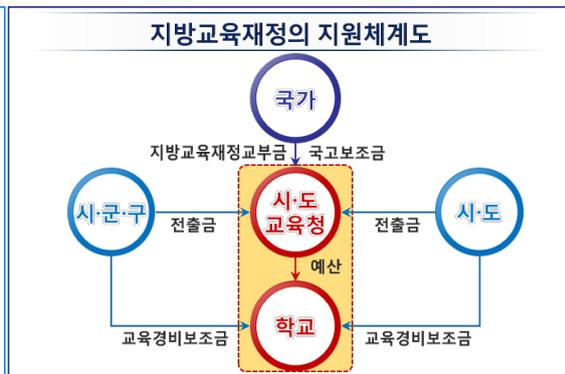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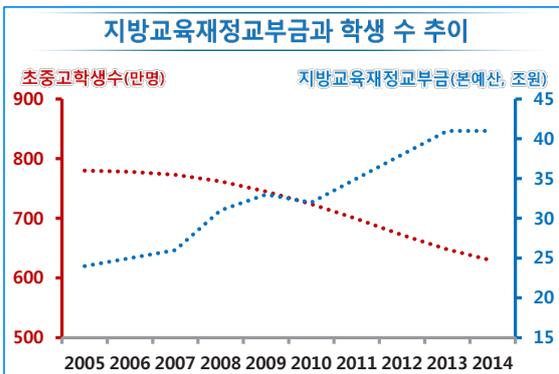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최근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교부세 제도(1960~)의 보완 미흡**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체세입 증가시 줄어들어 지자체 스스로의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
- 총 75조원(2014년)이 이전되나, 기초연금·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에는 소극적

-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모순**

- ※ 교육감 직선제로 선심성 사업 우선추진, 교육재정의 복잡성으로 효율성 저하
- ※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 1.5조원 이상 불용액 발생(그럼에도 지방채는 1조원 발행)
- ※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지출은 급증(94%)하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D·E 등급 104개)이 많음에도 시설비는 감액(-8%)



소결

- 소규모 개방 경제 ; 국제 사회에서 국가신뢰는 매우 중요

- 재정건전화는 상징성을 갖는 의미가 있음

- 한편 재정은 적절한 지출이 목적 ; 국민경제에서의 역할

- 국민의 재정 모니터링 기능 강화 필요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 론 5

2021년도 예산안과 재정정책 방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2021년도 예산안과 재정정책 방향

2020. 10. 28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Corona 경제위기

COVID-19 Crisis:

전혀 다른 성격의 경제위기 → 고령화·저성장·불평등으로 인한 재정의 삼중고(三重苦)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

- 특징: 봉쇄·차단으로 인한 세계적·세기적 경제사회 복합 위기, 수요-공급 동시 충격
- 진행: 전염병 사태 장기화로 경제위기 지속 위험 커짐
- 양상:
 - 단기적: 수요충격 상대적으로 더 문제, 경제주체 적응력, 재정정책 대응력 기대
 - 장기적: 공급충격이 더 두드러질 전망, 경제주체 적응력 한계, 폐업과 도산 재정정책 대응 한계, 방법은? Contingency Plan
 - 최종적: 무대응 시, 시장청산(market clearing)에 의한 변화로 귀결될 것 역성장, 재화·서비스 디플레, 자산시장 버블붕괴 → 예측불가 상황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재정운용의 근본적인 개편 가능성

COVID-19 Crisis

장기화 위험 대비/항구적 여파에 적응 → 재정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 관점과 역할

- 대비: 어느 시점부터는 survival plan
 - 생산기반 붕괴 방지(capital vs labor, 거래선 supply chain)
 - 자원 비축: 마스크 사태로 끝나지 않을 것, 식량과 에너지 확보
 - 계획경제적 요소 불가피: 방역사회 + 동원체제
 - 궁극적 대응:
 -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경제의 대응은 현재 금융·재정 전통적 수단에 국한
- 궁극의 변화 → 시장: 새로운 거래방법(New Market Rule), 안전한 유통
 정부: 생애주기적 소비·소득 보장, 무한신용제공, 기본소득제도

Post-Corona 환경변화 대응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대외환경 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재정은 계속 핵심적인 역할 수행해야

포스트 코로나 경제환경의 불안요인

- 세계적 경기침체 지속
- 대·중소기업 파산증가와 산업통폐합
- 일부 국가 산업·업종에서 회복 실패
- 구조적 실업(특히, 청년)
- 사람과 재화의 국경 이동 제한 강화
- 주요국의 재정상황 악화
- 글로벌 공급망 파열 지속
- 신흥국·개발도상국 경제
- 근로방식변화로 사이버공격·데이터사기 발생
- Covid19나 다른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TOP TEN

Most likely fallout for the world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2020): COVID19 Risks Outlook: A preliminary mapping and Its Applications

COVID-19 Risks Outlook A Preliminary Mapping and Its Im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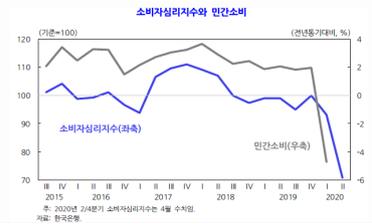
원칙: 확장적 재정운용 vs 재정건전성 유지

- 재정건전성 유지는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의 재정운용에 가해지는 일정한 현실적 제약으로 이해해야 함
 - 즉, 중장기적 목표이자 단기적 제약이라는 2가지 속성을 모두 지님
-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는 성격은 다르지만, 강도와 범위는 외환위기에 버금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선 수준임
 - 수요-공급 측면 복합위기: 극심한 전세계적 침체+대규모 실업+수출급감+소비침체
-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 관건은 우리 경제의 Fundamental이 심각히 훼손되지 않도록 가계의 인적자원과 기업 생산기반을 온전히 보호하는 데 있음
- 이때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의 핵심은 **중장기적 차원의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 재정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있음**
 - 재정건전성 유지는 현재 위기국면에서 **정책의 제약요인이자 목표는 아님**

[IMF 2020~2021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1월 발표(A)	2020.4월 발표(B)	조정축 (B-A)	2020.1월 발표(C)	2020.4월 발표(D)	조정축 (D-C)
세계	2.9	3.3	-3.0	-6.3	3.4	5.8	2.4
선진국	1.7	1.6	-6.1	-7.7	1.6	4.5	2.9
미국	2.3	2.0	-5.9	-7.9	1.7	4.7	3.0
유로지역 (독일)	1.2	1.3	-7.5	-8.8	1.4	4.7	3.3
(이탈리아)	0.6	1.1	-7.0	-8.1	1.4	5.2	3.8
일본	0.3	0.5	-9.1	-9.6	0.7	4.8	4.1
영국	0.7	0.7	-5.2	-5.9	0.5	3.0	2.5
중국	1.4	1.4	-6.5	-7.9	1.5	4.0	2.5
한국	2.0	-	-1.2	-	-	3.4	-
신상경도국	3.7	4.4	-1.0	-5.4	4.6	6.6	2.0
중국	6.1	6.0	1.2	-4.8	5.8	9.2	3.4
러시아	1.3	1.9	-5.5	-7.4	2.0	3.5	1.5
교역량	0.9	2.9	-11.0	-13.9	3.7	8.4	4.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4,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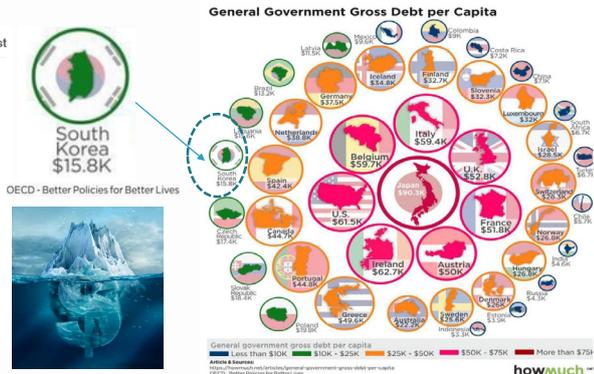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 코로나 경제위기 발생으로 국민의 Welfare State에 대한 기대와 지향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
 -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와 확대 재정정책의 활용은 이제 Global Norm으로 자리잡는 추세
 - 고령화·저성장·불평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재정정책의 적극 활용은 불가역적 현상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 1) 재정의 효율성 2) 재정유지가능성 3)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Efficiency of Government Spending>

Rank/136	Country / Economy	Score	Trend	Distance from best
1	United Arab Emirates	6.2	↔	0.0
47	Australia	3.6	↔	2.6
48	Ethiopia	3.6	↔	2.6
49	Ireland	3.6	↔	2.6
50	Seychelles	3.6	↔	2.6
51	Thailand	3.6	↔	2.6
52	Morocco	3.6	↔	2.6
53	Korea, Rep.	3.5	↔	2.7
54	Mauritius	3.5	↔	2.7
55	Estonia	3.5	↔	2.7
56	Jordan	3.4	↔	2.8
57	Russian Federation	3.4	↔	2.8
58	Pakistan	3.4	↔	2.8

World Economic Forum GCI 2018: points 1~7



불확실한 재정 승수 효과

Q: 재정의 양적확대가 총수요 진작에 기여하고, 기대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

- 오래된 논쟁, 확실한 결론 안나(IMF 2012; CBO: 0.1~2.5)
- 극심한 경기침체기 잘 조율된 재정확대 필요성 수용
- 통화정책과의 조화 매우 중요
- 재정의 적기 투입 매우 중요(정치적 과정이 문제)
- 유동성 제약 하의 경제주체를 targeting한 이전지출 증대 위주의 정책(실업급여 대상과 수준 확대 등)
- 대체로 최근 들어, 승수효과가 약해지고 있음

승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계부채, 수입비중
- 낮은 생산성, 비효율적 부문의 경직적 지출 비중
- 지출구조, 시점(timing)과 과정, 정부신뢰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가 매우 중요한 이유!

재정승수: 최근 국내연구 결과

- 김소영·김용건(2020): 장기재정승수 0.6~0.7
- 류덕현(2019): 소비기준 최대 0.44, GDP기준 0.18 정도
- 이강구·허준영(2017): 승수 0.15
- 김태봉·허석(2017): 2000년 대 이후 재정지출승수 지속적 하락: 통계적 유의성 낮고 시차문제
- 조세연구원(2017): 지출승수 0.513
- 한국경제연구원(2019): 지출승수 0.58

재정승수: 해외 연구 결과 중에

- Leeper et al(2017): 통화정책 병행시에만 경기부양효과 나타남
- Gemmell et al.(2012): 승수는 오히려 음수(-)
- 실제 OECD 국가들 과거 재정안정화로 성장을 호전(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 재정 효율성 제고

• 재정지원 조준정책(targeted fiscal measures)

-경제 내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조준하여 설계된 선택적 지원 정책은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재정 효율성 제고의 필수 요건

*IMF Fiscal Monitor(2020), Policies to support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거래·행정비용을 이유로 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
- 전문적인 재정·복지정책 전문가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최적화된 지원정책을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



• Gradual Delivery

- "the optimal fiscal policy response for countries with fiscal space is large stimulus but delivered gradually"

(Abadie, 2020.4; What Is the Optimal Fiscal Policy Response to the COVID-19 Recession?)

- COVID19의 부정적인 경제적 충격의 크기는 역사적 희귀사태에 해당
- 재정여력이 허용하는 한 대규모 재정투입 활용하되, 재정자원을 일거에 소진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점진적 방식으로 투입
- 대공황처럼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주는 경제적 충격은 오랜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는 점에 대비해야 함



Decision Boundaries, 2020.4.14; <https://decisionboundaries.com>

Post Corona: More Works !

- 그동안 거시재정 측면의 이슈 위주로 논의: 재정의 양적확대, 통화정책과 조화, 적정 국가채무비율 등
 -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한 시점이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없이는 효과 얻기 힘들
- 재정정책의 미시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
 - R&D 본연 기능(새롭고 위험한 투자), 생산성 위주 관리
 - 중소기업 R&D 인프라 확충, 사업화 실효성 제고,
 - SOC 우선 순위, 경제성 기반한 선별적 관리
 -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중심 일자리 정책

정보화(90년대) 대 디지털화

	정보화	디지털화
핵심요소	정보인프라	데이터
정책수단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성과·평가	가시적 단기간	복합적 장기간
거버넌스	정부 주도 대기업 참여	시민참여 중요

*서중해(2019)

- 정부역할의 우선순위: 재분배·복지(포용) > 환경 > 교육·문화 > (산업)혁신 >
 - *산업화 이후 시기에 정부 주도에 의한 혁신의 성공 사례 존재하나?
- 혁신적이지 못한 공공부문은 혁신을 창출하기 어려움
 - 경직적 행정, 부처 간 이해 대립: 재정투명화, 재정정보의 완전 공개
 - 민간전문인력의 정책참여: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분 더 이상 필요한가?
- 개별 재정투자 사업을 미시적 측면에서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시킬 방법 개발
 - 예비타당성 평가, 재정사업평가, 심층평가, 국고보조금 평가, 국정사업 평가
 - 효과의 검증과 평가결과의 환류가 성과제고로 연결되지 못하면 무의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재정여건

재정여건:

'18년 이후 적극재정 기조 + 코로나 위기 대응 확대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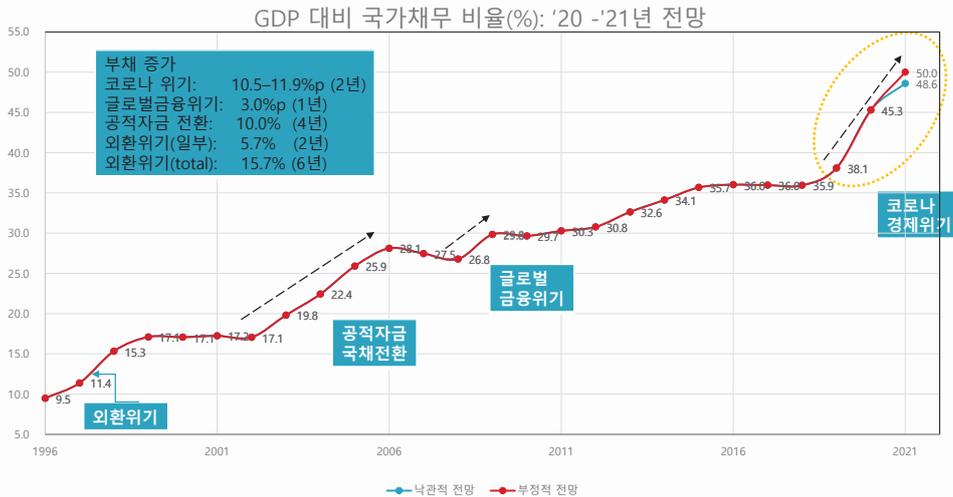
→ 재정여력 빠르게 소진

→ 국가채무 속도 모두의 예측을 벗어난 증가 속도

→ 재정수입 증대 필요

→ 총수입의 가장 큰 부분(62%)인 국세수입 확충이 관건

2020-2021년 국가채무 전망: GDP 대비 비율



포스트 코로나 중기 재정전망: 기재부(2020.8)

- 성장률, 세입증가율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23년 이후 재량지출에 대한 낮은 증가율 가정해도,
-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은 5.4-5.9% 유지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년 43.9%에서 '24년 58.6%로 급증(4차 추경반영)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기획재정부(2020.8)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71.5	△111.5	△109.7	△123.2	△128.2	△127.5
(GDP대비, %)	(△3.5)	(△5.8)	(△5.4)	(△5.9)	(△5.9)	(△5.6)
※ 통합재정수지	△30.5	△76.2	△72.8	△83.7	△87.9	△88.1
(GDP대비, %)	(△1.5)	(△3.9)	(△3.6)	(△4.0)	(△4.0)	(△3.9)
▣ 국가채무	805.2	839.4	945.0	1,070.3	1,196.3	1,327.0
(GDP대비, %)	(39.8)	(43.5)	(46.7)	(50.9)	(54.6)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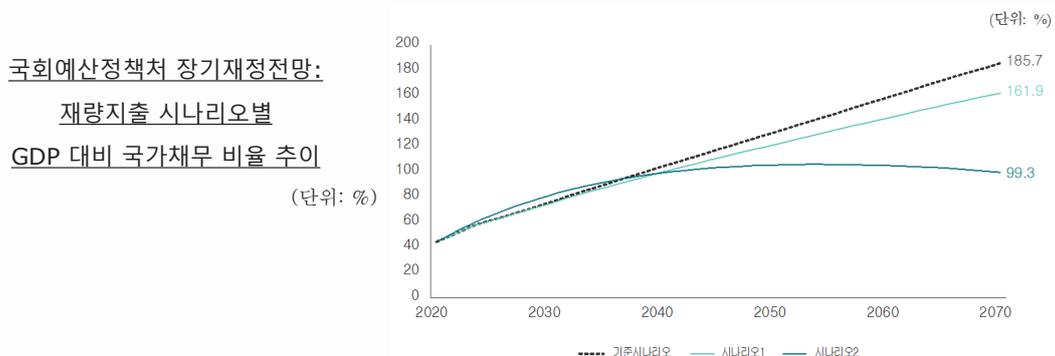
재정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 70년대 만성적 재정적자는 고도성장으로 커버; 80년대 재정안정화가 비축한 재정여력으로 외환위기 극복
- 2000년 이후 양입제출 원칙 → 채무비율 목표제 → 대규모 적자 누적 → **New Fiscal Rule에 의한 재정통제 필요!!**

Before Corona			Post-Corona
<p>정부주도 고도성장기 (1980년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물가불안정·외채누적 요인 • 높은 경제성장율로 재정 건전성 문제 일부 극복 -정권 말 증세 시도: <p>1972년 체제의 낮은 세 부담 → 부가가치세 증세 전환 시도 → 유신체제 전복</p>	<p>시장경제전환기 (1980~ 199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수지 흑자 노력 재정안정화로 부채 축소 • 양입제출 원칙 확립 -건전재정에 기반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외환 위기 조기 극복에 성공 	<p>경제 자유화와 개방화 (2000~201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 국채전환·지출확대로 수지불균형 적자규모: GDP 3% 미만(2% 내외) • 국가채무 목표 설정 (암묵적 지출통제: 경상성장률 이내) - 정부 초연 세출조정 시도, 정부 말로 수지균형 이연 <p>*글로벌 경제위기·복지지출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박)'증세 없는 복지' 기조 견지 → (담)세 증세 후 정권 탄핵 (문)'서민증세 없는 복지' 기조 유지 위해 국가채무 목표 설정 포기</p>	<p>Welfare State (2020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위기로 재정팽창·적자확대·만성적 수지불균형 적자규모: GDP 6% • 재정안정화 + 재정준칙 증세 vs 세출구조조정(빠 깎는?) • 국가채무 방치: → 국가채무 비율 급등 (매 10년 동안 40%p ↑) → 재정건전성 기반 급속 붕괴 → 재정관리 실패는 항상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워야 함

포스트 코로나 장기 재정전망: 예산정책처(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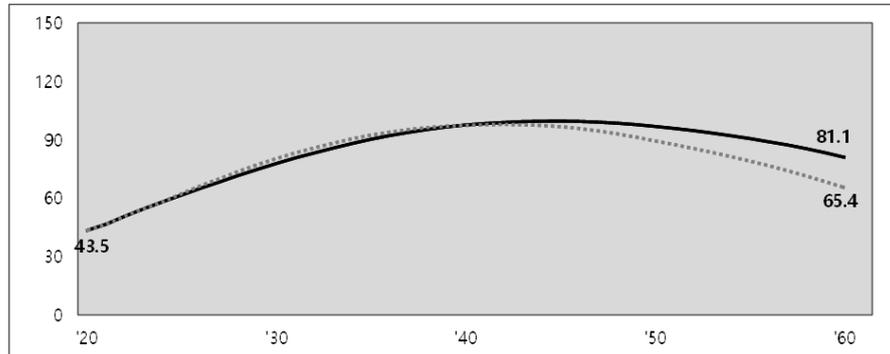
- 현행제도 유지된다는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매 10년마다 거의 30%p 상승
(재량지출: 경상성장률 2.2% 증가 가정)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 제안



포스트 코로나 장기 재정전망(관리계획?): 기재부(2020.9)

- 무대응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20년 43.9%에서 2045년 99%, 2060년 81.1% 수준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매 10년마다 22%p 상승
(총지출: 경상성장률로 증가 가정 → 관리재정적자를 3% 초반에서 통제)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단위: %)



새로운 재정관리 제도

기재부의 포스트 코로나 재정관리 방안

- '25년 재정준칙 도입: 채무비율 60% + 통합재정수지 3%
 - 기재부의 관리목표 자율조정 권한(현재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시행령 격상)
 - 의회 복지지출 법안 발의 시 Pay-Go 원칙 적용
- 시행령의 지위로 의회의 정치적 개입 견제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지위 격상 필요, 가능하다면 준헌법적 지위 부여
 - 의회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준칙 운영 방지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필요
 - 중립적 재정기구가 재정준칙과 Pay-Go 원칙 적용 동시 관장
 - 통합재정수지 3% ≒ 관리재정수지 4.3%:
 - 균형경상성장률 3.5% 가정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장기적으로 127%로 수렴
 - 관리재정수지 3%에서도 채무비율은 89%로 수렴
 - 현실적인 목표는 "관리재정수지비율 평균 2.5%(상한 3%)-채무비율 75%"

재정안정화 정책: 세입확충 및 지출삭감

필요한 재정안정화 규모

-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 6%를 3%로 축소하는 재정안정화 정책 필요
- 60조원 규모의 세입확충 및 지출삭감이 필요
- 이러한 노력이 성공해도 채무비율은 장기적으로 80~90%로 수렴한다는 점 유의

“세입확충(30조원) : 지출삭감(30조원) 재정강화 plan 하에서,
매년 적자재정 보전 위한 채무 증가는 50조원 이내로 통제”

→ 부가가치세(71조원)나 법인세(72조원)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의 증세 필요
또는 “유류세(15조원)+개별소비세(10조원)+상속증여세(8조원)” 규모의 증세 필요

지출효율화 정책의 관건: 누가 Key Driver?

지출혁신: '19-'23 중기재정운용계획

◆ 지출구조조정

- 지출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 의무지출: 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구구조 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 통해 절감
- 증액·신규 재원은 구조조정으로 충당

➔ “교과서적 차원의 지침”

◆ 지출구조 개선

- 재정사업심층평가·환류강화(예산일정조정)
- 핵심사업평가 본격 추진, 기금평가 강화
- 특별회계·기금 간 칸막이 최소화
-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

➔ “평가 방식의 지출효율화” 요원..

재정개혁

재정제도 변화, 자원배분구조 전면적 개편

- Zero-Based Budget
- 재정안정화(Fiscal Consolidation)

➔ 재정위기에 준하는 상황 도래할 때나 가능?

• 지출구조조정

실효성이 높지 않거나 수요가 부진한 일부 재량지출 분야를 구조조정해 재원을 줄이는 노력

- 전가의 보도: “예산10% 절감!” 구호
- 구두선, 선언적 의미, 모호한 실체
- 잦은 반복, 국민적 피로감만 누적
- 사회적 반항이나 지지 높지 않음

➔ 부처 단독 의지로 추진 불가
정권 차원의 Driving Force 요구

지출구조개선: 융합예산과 융합기금?

• 융합예산

- 현행 부처별 사업예산 편성의 한계
- 병렬적 유사중복 사업으로 재정 비효율 초래
- 이 문제 극복위해 융합예산제도 도입
- 다부처가 관계되는 특정 분야 예산은 융합예산편성단에서 총괄하여 편성
 - R&D
 - 일자리
 - 저출산, 여성, 아동
 - 미세먼지 대응: 환경과 에너지

• 융합기금

- 기금 간 칸막이식 자원배분 경직성 해소 위해, 관련 기금이나 동일 부처 소관 기금들은 하나로 묶어 통합관리
- 거부하면 통폐합 대상 심의 받게 해야

성공적인 증세정책의 어려움

“ 민주화된 정치체제 하에서 증세정책의 경험이 매우 적었고, 특히 성공적인 증세정책은 아직까지 없었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 정부
부가가치세 도입
(강한 조세저항 정권 몰락 도화선) • 노태우 정부:
토지초과이득세(폐지, 위헌소지) • 노무현 정부:
종합부동산세(완화, 위헌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개정원안 철회, 연말정산 파동, 재개정 소급 적용) 담배세 전격인상
(서민증세 반발과 총선에 악영향?) • 문재인 정부:
핀셋부자증세(소득세·법인세·종부세),
주택투기 방지용 거래·보유·양도세 과세강화
(가격안정화 달성? 조세=징벌수단?) |
|--|--|

세입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 기본전략 수립

조세정책 기본전략 수립 의무화

- 주요 세제개편이 연례적 정부 세법개정안 통해 분절적·단속적 방식으로 제안되고 주도됨
- 단기적인 시계 하에서 개별적인 정책목적에 따라 세제가 바뀌어, 세제의 통일성 훼손, 방향성 모호, 안정성 저해
- 정부 초기 조세정책 기본전략 통해 임기 전체(5년)를 관통하는 세제 개편·운영 목적과 원칙,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공표

조세정책의 원칙

<조세정책의 원칙>

- 복지지출 증가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 조세부담율(국민부담율) 적정화 필요성: 공론화 과정(예: 증부담-중복지)
-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 회복
 - Tax Mix의 불균형 시정
 - 간접세보다는 직접세(개인소득세와 재산과세) 강화 필요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 「넓은 세원, 적정 세율」
 - 과세정상화의 1차 과제: 비과세·감면의 축소로 실효세율 회복
 - 2차 과제: 적정 세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통해 명목세율체계 개편
-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에 역점
 - 독점적 이윤에 대한 과세 강화: 기업의 소득이 아닌 초과이윤에 과세
 - 부동산자산의 과도한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보다는 토지 위주의 과세
- 세목 정비 및 폐지: 세제 선진화 조치
 - 목적세 정비, 세목 축소·폐지(개별소비세 정비, 인지세 폐지)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 구축: 독립재정기구

- 현재의 대립적인 의회 구도나 중앙집권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규모 증세나 세출 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증세의 정치경제학: 의원내각제 하의 협치가 증세에 유리하고 대통령제는 증세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음
- 실제 우리나라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에도 성공적인 증세정책을 경험하지 못했음
- 국회 내 협치를 통한 정책합의가 최선이지만,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하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북유럽 방식; 스웨덴)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 구축: 독립재정기구

- 다른 대안으로 재정정책 결정권을 전문 관료로 구성된 행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영국식, von Hagen 1992)이 있으나, 과거의 경제기획원(EPB)으로 회귀하는 복고적 체계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함
-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회 내 재정협의회(또는 재정위원회)나 행정부와 의회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CBO
 - 네덜란드 CPB
 - 영국 OBR
 - 호주의 Parliamentary Budget Office 등
-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주된 장점은 여야 간 정파적 대립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정책분석에 근거하여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임

발간일 2020년 10월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0
